

연구보고서 2016-44-06

저출산에 대한 문화적 접근

- 성평등주의와 출산의 관계



계봉오 · 김영미

【책임연구자】

계봉오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주요 저서】

Education, elderly health, and differential population aging in South Korea: A demographic approach

Demographic Research, 2014 (공저)

Intergenerational effects of shifts in women's educational distribution in South Korea: Transmission, differential fertility, and assortative mating

Social Science Research, 2012 (공저)

【공동연구진】

김영미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연구보고서 2016-44-06

저출산에 대한 문화적 접근

- 성평등주의와 출산의 관계

발행일 2016년 12월 31일

저자 계봉오

발행인 김상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30147]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1~5층)

전화 대표전화: 044)287-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제8-142호)

인쇄처 (사)아름다운사람들복지회

가격 5,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6
ISBN 978-89-6827-415-2 93330

제출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연구용역 「저출산에 대한 문화적 접근 - 성평등주의와 출산의 관계」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6년 9월 30일
국민대학교 산학협력단



목 차

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저출산과 성평등주의적 관점	7
제2장 선행 연구 검토	15
제1절 출산율의 변화 추이	17
제2절 출산율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	22
제3절 인구 정책과 출산율의 관계	26
제3장 이론적 논의와 연구 가설	31
제1절 다중상태 평형이론	33
제2절 다중상태 평형이론과 생활양식 선호이론 (Lifestyle Preference Theory)	38
제3절 미시-거시 연결을 위한 개념 틀과 연구 가설	41
제4절 연구 가설	45
제4장 자료와 방법론	53
제1절 국제 비교	55
제2절 한국 출산력 조사(1991-2015)	60
제3절 통계 모형: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	62
제4절 방법론적 제약과 해석상의 유의점	63

제5장 결과	67
제1절 국제 비교	69
제2절 한국 출산력 조사 분석 결과	89
제6장 결 론	107
참고문헌	111

표 목차

〈표 3-1〉 생활양식 선호실현 유형	40
〈표 5-1〉 나라별 기술통계	72
〈표 5-2〉 국가별 거주 자녀 수에 미치는 취업 상태, 교육 수준, 성역할 태도의 영향 요약	78
〈표 5-3〉 이상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거시적 요인들 다층분석	81
〈표 5-4〉 거주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거시적 요인들 다층분석	84
〈표 5-5〉 기술통계	91
〈표 5-6〉 출생아 수와 다른 변수의 상관관계	91
〈표 5-7〉 출생아 수와 교육수준과의 관계	92
〈표 5-8〉 출생아 수와 취업 및 아들 선호의 관계	93
〈표 5-9〉 출산의도별 부인의 연령, 남편의 연령, 혼인 기간 비교	94
〈표 5-10〉 출산의도와 교육, 취업, 아들 선호의 관계	95
〈표 5-11〉 출생아 수와 성 역할 태도 및 취업 상태의 관계(Poisson 회귀분석)	97
〈표 5-12〉 출산의도와 성 역할 태도 및 취업 상태의 관계 (Logistic 회귀분석, 출생아 수 2 이하, 출생아 수 통제안함)	98
〈표 5-13〉 출산의도와 성 역할 태도 및 취업 상태의 관계 (Logistic 회귀분석, 출생아 수 2 이하, 출생아 수 통제)	99
〈표 5-14〉 출생아 수와 아들 선호 및 취업 상태의 관계(Poisson 회귀분석)	100
〈표 5-15〉 출생아 수와 아들 선호 및 취업 상태의 관계(Poisson 회귀분석)	102
〈표 5-16〉 출생아 수와 아들 선호 및 취업 상태의 관계(Poisson 회귀분석)	104
〈표 5-17〉 출산 의도와 아들 선호 및 취업 상태의 관계(다수준 logistic 회귀분석)	106

그림 목차

[그림 2-1] 미국과 스웨덴의 20세기 출산율 변화	20
[그림 2-2] 합계출산율과 인간개발지수 간의 횡단적 관계(1975년과 2005년)	24
[그림 2-3] 인구 정책과 출산의 관계	27
[그림 3-1] 다중상태 평형이론에서 가정하는 성평등주의의 확산과 출산율의 관계	36
[그림 3-2] 성평등주의의 확산에 따른 출산율 변화 패턴	37
[그림 3-3]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사회적 결과에 대한 일반 이론 모형	42
[그림 4-1] ISSP 거주 자녀 수와 총 출산율의 상관관계	57
[그림 5-1] 여성의 취업 여부와 거주 자녀 수의 국가 간 변이	74
[그림 5-2] 여성의 교육 연수와 거주 자녀 수의 국가 간 변이	76
[그림 5-3] 여성의 성역할 태도와 거주 자녀 수의 국가 간 변이	77
[그림 5-4] 가족 지원(현금수당과 가족 서비스)과 취업 상태의 상호작용 효과	86
[그림 5-5] 남녀 임금 격차와 학력의 상호작용 효과	87
[그림 5-6] 남녀 인식 차이와 여성의 성역할 태도의 상호작용 효과	89
[그림 5-7] 지역 수준 아들 선호에 따른 출생아 수 차이와 아들 선호의 변화	102

Cultural approach to low fertility: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galitarianism and fertility

1. Background and purpose

Low fertility is a consequence of various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processes. This suggests that we need to understand the complex relationships among them to address the challenges from low fertility. In particular, we need consider both macro and micro mechanisms simultaneously. This study focuses on gender egalitarianism and women's preference realization. Women's preference realization is related with micro-level cultural dimension while evolution of gender egalitarianism is related with macro-level cultural dimension. We are examining how these two factors affect fertility, interacting with each other, from the perspective of gender egalitarianism.

2. Main findings

First, we apply mixed-effects linear regression model by using the 2012 ISSP data to compare how micro and macro level

2 저출산에 대한 문화적 접근 - 성평등주의와 출산의 관계

factors are associated with fertility in 21 countries. We find that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and micro-level variables such as employment status, education and gender attitude varies greatly by countries. Interestingly, the relationship is sensitive to macro-level gender equality. Employed, highly educated, and liberal women show high fertility when gender equity is well institutionalized in terms of labor market, family welfare, and cultural dimension.

Second, the results from the analysis of the “Korean Fertility Surveys(1991-2015)” show the following. The relationship between gender equality and fertility did not change substantially over time. This suggests that gender egalitarianism is not yet fully institutionalized in Korea and this is an important source of lowest-low fertility in Korea. This suggest that diffusion of gender egalitarian attitude is an important condition for fertility rebound in Korea.

3. Discussion

Myrsklya et al.(2009) showed that Korea and Japan are exceptional case in which fertility did not rebound recently. This was interpreted as a consequence that work-family balance and gender egalitarianism were not fully institutionalized. They argued that the affluent East Asian countries failed to institutionalize work-family balance and gender egalitarianism and was not

able to effectively cope with the challenges from low fertility. We showed that highly educated, liberal and employed women are the group with low fertility in these countries. This group may not change their reproductive behaviors unless gender egalitarian environments are fully developed. This pose a great challenge for population policy in Korea.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저출산은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을 갖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원인들과 이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산은 거시적 조건 및 미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다양한 저출산의 원인 중에서 문화적 요인의 중요한 요소인 성평등주의와 여성의 선호실현에 주목한다. 성평등주의의 발전은 거시적 차원에서의 문화적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여성의 선호실현은 미시적 차원의 문화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연구는 성평등주의적 관점에서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 그리고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주요 연구 결과

첫째, ISSP 2012 자료를 활용하여 21개 국가의 20-45세 여성들의 출산 결과의 대리변수로 가구 내 18세 이하 거주 자녀 수에 대한 혼합효과 선형(mixed-effects linear)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미시적 수준에서 출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특히 여성의 취업 상태, 교육 수준, 성역할 태도의 영향력은 국가 간 변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취업 상태에 있을수록, 고학력일수록, 성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거시적 환경의 성평등주의 정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였다. 이들 여성들은 노동시장, 가족복지, 문화적 측면에서 성평등주의

가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국가들에서 뚜렷하게 긍정적인 출산 결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 “한국 출산력 조사(1991-2015)”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주의적 태도와 출생아 수 및 출산 의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지난 20여 년 동안에는 성평등주의와 출산의 관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주의적 제도가 자리 잡지 못했으며 이것이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 성평등주의와 출산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도 있는데, 이는 성평등주의적 태도의 확산이 향후 한국의 출산력 반등을 위해서 중요한 요인임을 시사한다.

3. 결론 및 시사점

Myrsklya et al.(2009)의 연구는 한국, 일본이 HDI와 출산율 관계의 역전을 보이고 있지 않은 예외적인 국가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일-가족 양립과 젠더 평등의 미제도화의 결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일-가족 양립 그리고 젠더 평등의 제도들을 통해 인적 개발의 도전을 대응하는 데 실패한 것이야말로 부유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HDI-출산율의 부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는 이유이다(743)”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여기에 이 연구는 젠더 평등의 미제도화의 결과 이들 국가들에서 가장 출산에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집단이 고학력, 진보적, 취업 여성들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여성집단은 사회전체적인 수준에서의 성평등주의적 재조직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쉽게 출산 결정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의한다.

*주요 용어: 출산율, 성평등주의, 제도화

제 1 장

연구 배경 및 필요성:
저출산과 성평등주의적 관점



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저출산과 성평등주의적 관점

저출산은 다양한 사회, 경제, 문화적 요인을 갖는 복합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원인과 이들의 관계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크게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거시적 요인들은 해당 사회의 경제적 요인과 문화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경기 변동과 개인주의의 발달 정도 등 거시적 요인들은 개인 혹은 커플의 출산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 미시적 요인들은 개인 혹은 커플들의 출산 의사결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인 혹은 커플들의 속성을 의미하는데, 이들의 경제 상태, 가치관 등을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출산은 이러한 거시적 조건 및 미시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요인들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는 다양한 저출산의 원인 중에서 문화적 요인의 중요한 요소인 성평등주의와 여성의 선호실현에 주목한다. 성평등주의의 발전은 거시적 차원에서의 문화적 요인이라 할 수 있으며, 여성의 선호실현은 미시적 차원의 문화적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는 이들에 초점을 맞춰 저출산 현상을 이해하고자 한다.

대부분의 출산 연구는 여성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데, 이는 여성이 기본적으로 출산의 주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기간 합계출산율 등 출산율에 대한 측정치들은 대부분 여성의 연령별 출산율을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계산한다. 남성의 출산율을 측정하려는 시도 역시 존재하기는 하지만(Rendal et al., 1999), 이는 예외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구학의 이러한 ‘여성중심적인’ 접근 방식은 방법론적인 것에 국한되는 경우가 많으며, 성평등주의적 접근이라고 할 수는 없다. 즉, 여성을 출산의 담당자로 분석하는 것과 성평등주의적인 입장에서 출산을 분석하는 것은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출산은 남성과 여성의 친밀한 관계 형성의 산물인 혼인 혹은 동거를 기본적인 단위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성평등주의의 발전은 이러한 결합(union)의 형성, 유지, 해체 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성평등주의는 혼인 및 동거 커플의 출산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출산 행위는 노동시장의 조건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다. 특히, 자녀 양육 부담이 매우 큰 한국 사회의 현실을 고려할 때, 노동시장 조건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성평등주의의 발전 정도는 혼인 및 동거 커플의 노동시장 조건을 규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따라서, 성평등주의의 발전은 가족 혹은 커플의 형성, 유지, 해체, 출산 결정 등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성평등주의의 발전과 출산율 변화의 관계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경험적인 분석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서 성평등주의의 진전이라는 문화적 변화가 저출산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개입을 마련하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0세기 인구학 연구를 지배했던 큰 질문은 19세기 말 서구 산업사회에서부터 급진전된 다산다사(多産多死)에서 소산소사(少産少死)로의 인구행동의 변화, 이른바 제2인구변천(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었으며, 그 속에서 출산율의 급격한 저하와 저출산의 장기 지속, 일부 국가들에서의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1.3 이하의 초저출산 현상의 등장 및 지속 등이 연구의 주요 대상이었다. 그러나 1세기 가까이 산업사회에서 지속되어 오던 저

출산 현상이 1990년대에 시작된 유럽 국가들에서의 출산율 반등으로 새로운 전환을 맞고 있다. 출산율의 거대한 유턴이 시작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유럽의 일부 국가들에서 나타나고 있는 출산율의 반등은 견고하게 지속되고 있으며 거시 수준의 국가 간 비교 연구들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보고되고 있다. 1990년대까지의 자료에 기초한 분석에서 초저출산이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등장(Kohler, Billari and Ortega, 2002)한 지 10년이 되지 않아 2008년까지로 확장된 자료를 분석한 최근 연구(Goldstein, Sobotka, and Jasilioniene, 2009)는 초저출산 현상이 적어도 유럽에서는 끝났으며 출산율의 반등이 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는 낙관적인 결론을 내리고 있다.

20세기 인구학이 저출산 현상을 설명하는 데 집중하였다면 21세기 인구학은 저출산의 반등을 어떻게 설명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출산율의 역사적 궤적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국가 간 차이의 원인을 밝히는 연구들이 주목받고 있다. 왜 어떤 국가는 출산율의 반등에 성공하고 어떤 국가는 초저출산 상태에 장기간 갇혀 있는가? 출산에 대한 성평등주의적 접근은 90년대 이후의 일부 국가들에서 나타난 출산율의 극적인 변화 덕분에 최근 더욱 부각되고 있으며, 설득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McDonald, 2000; 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Goldscheider, Berhardt, and Lappegard, 2015). 가장 단순한 형태에서의 이 관점은 성평등주의의 제도화가 시작되는 초반에 출산율이 급격하게 하락하나 공적, 사적 영역에서 성평등주의가 제도적으로 안착하고 성숙해짐에 따라 출산율이 다시 증가하게 된다고 예측해 왔다. 합리적 선택 이론, 탈물질주의 가치 이론, 선호 이론, 제도 이론, 양성평등 이론 등 저출산에 관한 다양한 이론적 접근들(리뷰는 정성호, 2009 참고) 중 출산율의 역동적 변화에 가장 관심이 많았던 관점이 양성평등 이론이다.

저출산으로의 진입뿐만 아니라 저출산으로부터의 탈출 조건을 일관된 이론적 틀 속에서 설명해 온 이 관점이 최근 출산율의 반등 속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은 놀라운 일은 아니다.

최근 성평등주의적 관점에서의 다양한 경험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 거시 제도적 변화 및 국가의 정책적 대응이 합계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들(McDonald, 2000; Neyer, Lappegard, and Vignoli, 2011; Sleebos, 2003; Myrskylä, Billari and Kohler, 2011)부터 남녀 간 사적 교환 관계의 변화와 출산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Cooke, 2004; Brodmann, Esping-Andersen and Guell, 2007; Craig and Siminski, 2011)까지 다양한 주제 영역에서 성평등주의의 제도화, 규범화가 출산율의 회복 기저에 있는 중요한 사회적 조건임을 강조해 왔다. 그러나 기존의 경험 연구들은 몇 가지 한계점들을 노정하고 있다.

첫째, 이 관점에서 수행된 연구들의 대부분이 국가 수준의 비교 연구들이다. 게다가 미시적 수준에서의 연구들도 부족하지만 거시와 미시를 연결하는 연구는 거의 없는 상태이다. 따라서 성평등주의의 진전이라는 거시적 조건이 미시적 수준에서 개인의 출산 의도 및 출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은 편이다. 거시-미시 관계에 대한 관점의 부재는 암묵적으로 성평등주의의 제도적 조건들이 발전함에 따라 모든 여성들이 동일한 형태의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그러나 거시적 맥락의 변화는 여성들의 개인적 특성 및 사회적 위치에 따라 출산 결정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이에 대한 경험적인 연구들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특히 유럽의 출산율 연구자들 사이에서 이러한 거시-미시 연구의 필요성 주창하는 연구자들이 증가하고 있다(Philipov, Thevenon, Klobas, Bernardi, Liefbroer, 2010; Matysiak and Vignoli, 2012).

둘째, 미시 연구의 경우 출산 의도를 종속변수로 하는 로짓 분석 혹은 출산 타이밍에 대한 사건사 분석(event history analysis)이 대부분으로 실제 출산 결과(자녀 수)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편이다. 그러나 출산에 대한 사건사 분석은 자료의 한계로 거시-미시 연구를 수행하기에 제한점이 많으며, 이러한 방법론적 편향이 낳은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출산에 관한 미시-거시 관계에 대한 연구가 지체되어 왔다.¹⁾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들과 미시적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진하며 사실 이론적인 논의도 매우 제한적으로만 이루어진 나머지 경험적 검증을 위한 가설들도 충분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 결과 예컨대 성평등주의적 복지 정책이 제도화될 때 어떤 위치의 여성들의 출산 의도 및 출산 행동이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와 예측이 부재한 상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이 연구는 성평등주의적 관점에서 여성의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과 미시적 요인, 그리고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첫째,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ISSP) 2012 자료를 이용하여 21개 국가의 20-45세 여성들의 출산 결과의 대리변수로 가구 내 18세 이하 거주 자녀 수에 대한 혼합효과 선형(mixed-effects linear)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미시적 수준에서 출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중 특히 여성의 취업 상태, 교육 수준, 성역할 태도의 영향력은 국가 간 변이가 상당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이 취업 상태에 있을수록, 고학력일수록, 성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거시적 환경의 성평등주의 정도에 민감하게 반응하였

1) 물론, 사건사 분석 역시 거시적인 변수들을 모형에 포함할 수 있으며, 이를 활용한 다수준 사건사 분석 역시 방법론적으로 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준 사건사 분석에 적합한 자료를 적용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이러한 이유로 사건사 분석을 활용한 미시-거시 연계 분석은 드물다고 할 수 있다.

다. 이들 여성들은 노동시장, 가족 복지, 문화적 측면에서 성평등주의가 높은 수준으로 제도화되어 있는 국가들에서 뚜렷하게 긍정적인 출산 결과를 보이고 있다. 둘째, “한국 출산력 조사(1991-2015)”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주의적 태도와 출생아 수 및 출산 의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는 지난 20여 년 동안에는 성평등주의와 출산의 관계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직까지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주의적 제도가 자리 잡지 못했으며 이것이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단, 성평등주의와 출산의 관계가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결과를 제시하면서 보다 자세히 논의하도록 하겠다.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출산율 변화와 관련한 선행 연구를 검토한다. 3장에서는 출산의 국가 간/국가 내 변이에 관한 이론적 논의를 전개한다. 우선 이 연구의 기본적인 틀인 성평등주의와 출산율 변화에 관한 이론적 논의들을 검토하고, 출산에 대한 거시-미시 연계 연구의 현황을 리뷰한 후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출산율 결정하는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요인의 상호작용에 대한 성평등주의적 관점에서의 가설들을 제시한다. 4장에서는 자료 및 방법론에 대해 기술한다. 우선 국제 비교 연구를 위해 활용한 ISSP 자료의 특징 및 자녀 수를 종속변수로 하여 구성된 다층 모형의 미시적 변수들과 거시적 변수들을 소개하며, 한국 출산력 조사 자료에 대해 소개한다. 5장에서는 ISSP 자료와 한국 출산력 조사 자료의 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6장에서는 분석 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함의를 논의한다.

제 2 장

선행 연구 검토

제1절 출산율의 변화 추이

제2절 출산율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

제3절 인구 정책과 출산율의 관계



제1절 출산율의 변화 추이

합계출산율이 초저출산 수준인 1.3 수준으로 유지되면 다음 세대의 규모(generational size)는 이전 세대에 비해서 65% 수준으로 감소한다(McDonald, 2008). 이러한 추세는 장기적으로 유지되면, 인구 감소, 이에 따른 생산성 감소, 노년인구 부양 부담 증가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합계출산율 기준 1.3 이하의 초저출산 수준을 경험했으며, 남유럽·동유럽·동아시아 국가들의 경우에는 현재도 초저출산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Choe, 2015). 이는 초저출산이 일시적 혹은 지역적으로 특수한 현상이 아니라 출산율의 장기적인 변천 과정에서 어느 정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보여준다. 한편, 일부 국가들은 초저출산에서 벗어난 반면, 일부 지역에서는 여전히 초저출산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은 초저출산이 보편적이거나 불가역적인 현상은 아니며, 출산율의 반등이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에 따라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출산 행위에 대한 직접적·간접적 정책적 개입은 출산율 반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개입은 출산율 변화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 기반해야 할 것이다. 이 절에서는 출산율 변화의 추이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이러한 변화가 향후 출산율 반등을 위한 정책적 개입에 주는 함의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한다.

역사적으로 보면 세계 인구는 1) 다산다사(多産多死), 2) 다산소사(多産

少死), 3) 소산소사(少産少死)의 단계로 변천해 왔다(Dyson, 2010; Kirk, 1996). 다산소사의 단계에서 세계 인구는 급격히 증가한 반면, 소산소사의 단계에서는 인구 성장이 둔화되며 인구 구조가 고령화되는 특징을 갖는다. 출산율 변화와 관련된 연구들은 2단계에서 3단계로의 이행, 즉 출산변천(fertility transition)에 초점을 맞춰 왔다. 서구 사회의 경우에는 20세기 초반에 출산율이 대체 수준(합계출산율=2.1)으로 하락함으로써 출산변천이 완료되었다. 20세기 초중반의 경우 합계출산율이 대체 수준 근처에서 등락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여주다가 많은 국가들에서 1970년대 이후 대체 수준 이하로 출산율이 급락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합계출산율이 대체 수준 근처에서 안정화될 것이라는 고전적인 인구변천 이론(classical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의 예상(Coale, 1973; Notestein, 1945)에서 벗어나는 패턴이며,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2의 인구변천 이론(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등의 이론이 제시되었다(Lesthaghe, 1995; van de Kaa, 1987). 제2의 인구변천 이론은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등으로 인해 가족 중심적인 가치관이 하락한 것이 대체 수준 이하 출산율이 고착화된 주요한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는데, 이는 베커로 대표되는 경제학적인 접근 및 인과관계에 대한 설명 방식과 확연히 구별되지만, 출산율의 지속적인 하락을 설명하는 중요한 이론적 자원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에는 북유럽, 서유럽, 북미를 중심으로 출산율이 다시 반등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반면, 남유럽과 동아시아 등의 지역에서는 이러한 경향이 관찰되지 않고 있다(Choe, 2015; Goldstein et al., 2009). 이러한 경향은 경제학적 이론과 제2의 인구변천 이론에 의해서 설명하기 어려운 문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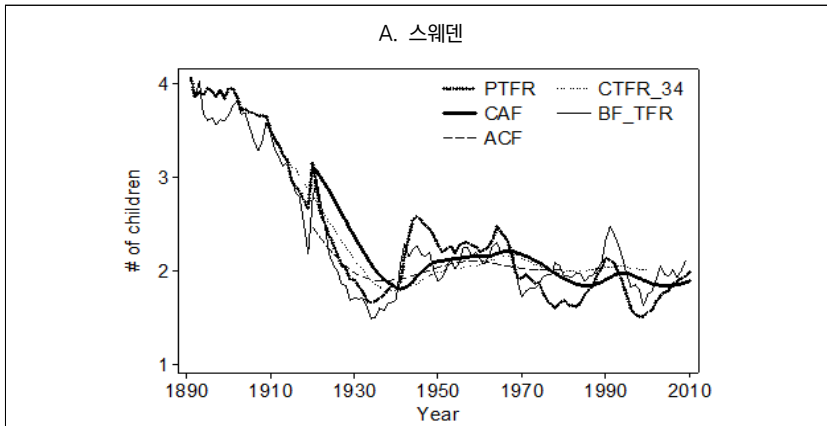
서구의 20세기 출산율은 시기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는 패턴을 보여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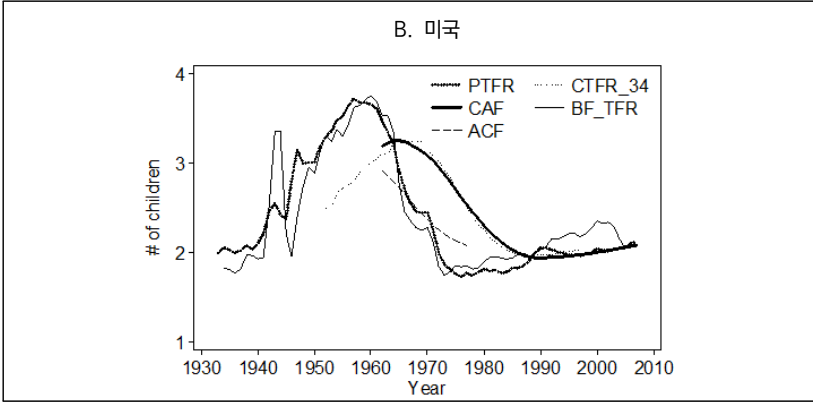
고 있다. [그림 2-1]은 스웨덴과 미국의 20세기 출산율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기간 합계출산율, 조정 합계출산율(adjusted total fertility rate), 코호트 완결출산율, 횡단-평균출산율(cross-sectional average fertility) 등 다양한 측정치들 모두 두 국가가 20세기 동안 출산율의 하락과 반등을 주기적으로(cyclically) 경험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두 국가에만 한정된 것이라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과 북미 국가들에서 관찰되는 패턴이다(Foster, 1990; Calot, 1993). 이는 출산율이 단선적인 경로(monotonic path)를 따라 지속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특정한 기간의 사회경제적 조건에 반응하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해 왔음을 보여준다(Pullum, 1980; Rindfuss et al., 1988). 방법론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러한 출산율의 주기적인 변화(cyclical change)는 기간 효과(period effect)가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보다 출산율 변화를 설명하는 지배적인 요인이었음을 보여준다(Calot, 1993; Foster, 1990; Pullum, 1980; Rindfuss et al., 1988).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60년대 초반까지 6.0 수준에서 등락했는데, 한국전쟁 직후의 사망률 하락과 베이비붐으로 인해 1950년대 후반부터 인구압력이 증가했으며, 이에 따라 인공임신중절의 증가 및 혼인의 지연 등으로 인해 출산력 하락이 시작되었다(Kwon, 1993). 이러한 경향은 1970년대 이후에도 지속되었는데, 강력한 가족계획사업의 실행과 사회경제적인 발전이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했다. 가족계획사업은 이상 자녀 수 및 아들 선호 가치관의 약화 등 가치관의 변화와 영구 불임시술 등 과학적 피임 방법의 확대를 결합한 형태로 진행되었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1983년에 대체 수준(2.1)에 이르렀지만,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는데, 합계출산율이 대체 수준 이하로 떨어진 이후에도 가족계획사업을 통한 출산 억제 정책이 지속적으로 실행되었다. 이는 정책적 판단의

실수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베이비붐 세대가 가임기에 접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율의 추가적인 하락이 없이는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가 예상되었기 때문에 해석할 수도 있겠다. 실제로 총 출생아 수의 경우에는 1970년대에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1980년대 초반에는 1970년대 중반 수준으로 회복되었는데(Kye 2012: 391), 이러한 출생아 수 증가가 가족 계획사업의 지속적인 실행의 경험적인 근거가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기간 동안 아들 선호 가치관이 하락했다는 증거는 그다지 발견되지 않고, 유지 혹은 강화되었다는 것이다(Choe and Park, 2006; Kye, 2014). 아들 선호 가치는 아들이 없는 부부의 출산율을 높여서 출산율 하락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지만(Rosen and La Raia, 1972), 한국의 경우 아들 선호 가치의 유지가 출산율 하락에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동했다. 이는 태아의 성에 따른 선별적 낙태(sex-selective abortion)가 광범위하게 진행되었으며, 아들 선호가 아들이 없는 부부의 출산율을 높이는 방향보다 오히려 아들이 없는 부부의 출산율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Kye, 2014).

[그림 2-1] 미국과 스웨덴의 20세기 출산율 변화





출처: Kye(2015). p.132; 자료: Human Fertility Database.

한국의 출산율은 1990년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하락했는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가 지속적인 출산율 하락의 중요한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여성의 고용 상태에 따른 출산율 차이가 이 기간 동안 증가했다(최경수, 2004; Choe and Park, 2006). 또한 1997년 경제위기가 이러한 경향을 가속화했으며(이성용, 2006),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05년 1.08로 최저점에 이른 후 현재까지도 1.3 미만의 초저출산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 이렇듯 한국의 출산율은 1960년대 이후 빠른 속도로 단선적으로 하락했는데, 이러한 단선적인 변화 역시 코호트 출산율의 변화보다 기간출산율의 변화에 의해서 보다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Kye, 2012). 즉, 20세기 중반 이후 한국의 출산율 변화는 방향과 속도의 측면에서 유럽 및 북미와 구별되는 특징을 갖지만, 출산율 변화의 주된 원인이 코호트 변화가 아니라 기간 변화라는 측면에서 이들 국가들과 공통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위에서 검토한 20세기 출산율 변화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20세기 출산율이 코호트 변화보다는 기간 변화에 의해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연구 결과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만약

코호트 변화가 출산율 변화의 주된 원인이라면, 출산율의 반등을 위한 정책은 코호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코호트 출산율 변화는 단기간에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기 때문에 출산 정책은 코호트의 생활양식의 변화 등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반면, 기간 변화가 출산율 변화에 주된 원인이라면 출산율의 반등을 위한 정책은 현재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는 출산율의 변화를 성평등주의의 확산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데, 이는 장기적인 요인에 초점을 맞추는 접근이며 코호트 접근법과 유사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기간 변화가 코호트 변화보다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기존 연구 결과들을 고려할 때, 이러한 접근법은 정책적인 측면에서 그 효과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인구 정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는 기간 효과와 코호트 효과의 비교에만 근거할 수 없으며, 보다 포괄적인 접근을 필요로 한다. 즉, 기간 효과의 상대적 중요성이라는 경험적인 근거가 반드시 장기적인 안목의 정책적 접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3절에서 인구 정책과 출산의 관계에 대한 보다 자세한 논의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2절 출산율의 변화와 사회경제적 변화

출산율 변화의 중요한 연구 주제 중의 하나는 출산율과 사회경제적 조건의 변화와의 관계이다. 특히 경제발전과 출산율 변화의 관계는 많은 관심을 끌어난 연구 주제 중의 하나이다. 경제발전과 출산율 하락이 같이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인 패턴이었는데, 1990년 중반 이후 북미와 유럽에서는 이러한 패턴에서 벗어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우선, 경제발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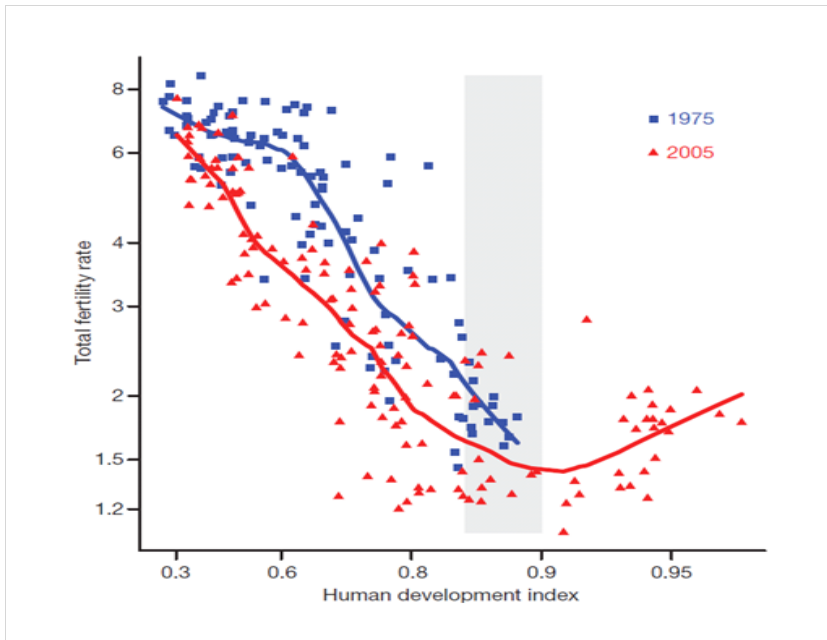
출산율 하락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인구변천 이론에 따르면, 사망률 하락은 출산율 하락의 전제조건인데 (Coale, 1973; Dyson, 2010; Notestein, 1945), 경제발전은 사망률 하락의 중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경제발전과 출산율 하락의 시작 시점은 긴밀하게 연결된다(Kirk 1996). 경제학적 이론 역시 경제발전 에 따라 출산율이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출산에 따른 직접적 비용과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Becker, 1960; Schultz, 1973). 경제발전 에 따라 자녀 양육 비용 이 증가하고 여성의 경제활동 기회가 확대되는데, 이는 출산의 직접적 비용과 기회비용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경제발전 에 따라 출산율이 하락하는 경향이 관찰된다는 것이다. 한편, 문화/이념적(cultural-ideational) 접근 역시 비슷한 예상을 제시한다. 이 접근 방식에서는 출산 통제 이념의 확산이 출산율 하락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는데(Cleland and Wilson, 1987),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은 출산율의 하락을 가속화하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Lesthaeghe, 1995; van de Kaa, 1987). 물론 문화/이념적 접근은 경제적 측면을 강조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발전과 출산율 변화에 대한 직접적인 설명은 제시하지 않지만, 경제발전과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이 같은 방향으로 진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이론 또한 경제발전 에 따라 출산율이 하락한다는 예상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최근의 경험적인 연구들은 경제발전과 출산율 간에 단선적인 관계가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2-2]에 따르면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HDI)와 합계출산율 간의 관계는 1975년과 2005년 사이에 근본적으로 변화했다(Myrskylä et al., 2009). 즉, 1975년의 경우에는 합계출산율과 HDI 간에 분명한 부정적인 상관관계

24 저출산에 대한 문화적 접근 - 성평등주의와 출산의 관계

가 존재했던 반면에, 2005년에는 둘 사이에 U자형 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이 올라가는 초기에는 합계출산율이 하락하지만, 사회경제적 발전 정도가 어느 수준(HDI 기준 0.8 이상)에 도달하면 이 관계가 역전된다는 것이다. 출산의 비용과 효용에 초점을 맞추는 경제학적 이론이나 문화/이념적 요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접근 모두 이러한 패턴을 설명하는 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경제적 발전이 출산의 직접적 비용과 기회비용을 줄이거나 개인주의적 가치관을 억제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경제적 발전과 출산율의 관계 역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이론적·개념적 설명 틀을 넘어서는 새로운 설명 방식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2] 합계출산율과 인간개발지수 간의 횡단적 관계(1975년과 2005년)



출처: Myrskylä et al.(2009). p.741.

비슷한 경향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 간의 관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즉, 1970년대까지는 둘 사이에 부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지만, 1990년대 이후로는 그 관계가 역전되어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은 국가들에서 오히려 출산율이 높게 관찰되고 있다(Brewster and Rindfuss, 2000; Billari and Kohler, 2004). 효용과 비용 혹은 가치관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경제학적 혹은 문화/이념적 이론 틀로는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개인 수준의 자료를 활용한 연구들은 자료와 국가에 따라 상반된 결론에 도달하고 있다. 경제발전 수준이 높은 20개 국가의 비교 연구(Hisgeman and Butts, 2009)나 미국의 사례를 분석한 연구(Budig, 2003) 모두 개인 수준에서는 여성의 고용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동유럽 국가에서는 고용이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통계적으로 무의미하다는 연구 결과 또한 최근 들어 보고되고 있다(Robert and Bukodi, 2005; Kreyenfeld, 2010). 폴란드의 경우 여성의 고용이 출산의 전제조건이 되고 있다는 결과 또한 제시되었다(Matysiak, 2009). 김현식의 최근 연구 또한 한국의 경우 고용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으며(Kim, 2014), 일본의 경우에도 여성의 고용과 출산 사이에 특정한 인과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Lee and Lee, 2014). 요약하면, 1990년대 이후 집합적인 수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을수록 합계출산율이 높은 경향이 관찰되는 반면, 개인 수준에서는 고용과 출산의 관계가 지역/국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북유럽, 서유럽, 북미의 경우에는 부정적인 관계가 유지되는 반면, 동유럽과 동아시아 국가들에서는 이러한 관계가 관찰되지 않는다.

흥미로운 것은 고용과 출산의 관계가 유의미하지 않은 국가들이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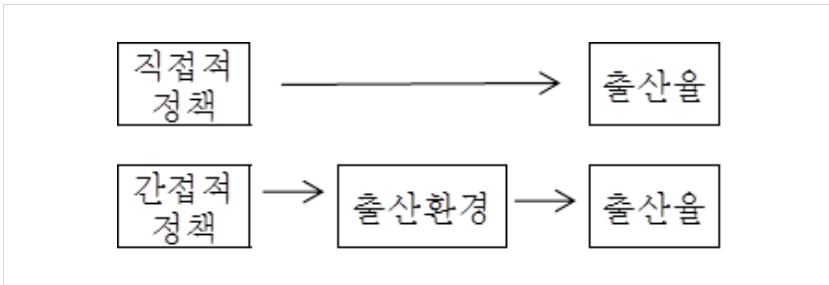
적인 저출산 국가들이며, 이들 국가의 성평등주의 발전 정도가 북유럽, 서유럽, 북미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는 성평등주의의 발전 정도가 출산율 및 출산과 고용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존 연구들을 성평등주의와 연결해서 재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성평등주의가 발달한 국가들은 전반적인 출산율 수준이 높으며, 고용이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유의미하다. 반면, 동아시아 등 성평등주의가 상대적으로 발달하지 않은 국가들은 출산율 수준이 낮으며 고용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가 무의미하다. 즉, 일하는 여성과 일하지 않는 여성의 차이가 이들 국가들에서 보다 크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성평등주의가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이 국가별로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 연구는 이와 같은 측면에 주목하여 성평등주의와 출산율의 관계를 심층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제3절 인구 정책과 출산율의 관계

인구 정책은 인구 조정 정책과 인구 대응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정경희, 2006). 인구 조정 정책은 국가가 출산, 사망, 이동 등에 영향을 미쳐서 인구 과정 및 인구 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 정의할 수 있으며, 인구 대응 정책은 인구 변화의 결과에 개입하는 정책이라 정의할 수 있겠다. 이 연구의 주된 관심은 인구 조정 정책, 즉 출산 정책이 어떻게 출산율에 영향을 주는지에 있다. 출산 정책은 인구 조정 정책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데, 이는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하나는 국가가 직접적으로 출산 행위에 개입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피임 방법의 보급 등 출산 억제 정책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으며, 출산 장려금

지급 등 최근의 출산 장려 정책 또한 이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국가가 출산 환경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인데, 일-가정 균형과 관련된 정책들이 이에 해당한다. [그림 2-3]은 이를 도식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2-3] 인구 정책과 출산의 관계



저출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출산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한 고티에의 연구는 출산 정책들의 효과에 대해서 확증적인 증거를 발견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Gauthier, 2007). 이 연구에 따르면, 직접적인 출산 정책이라고 할 수 있는 현금 지원 정책의 경우에는 무의미하거나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지원하는 정책은 대체로 긍정적인 효과를, 모성 휴가 등 일-가정 균형과 관련된 정책의 효과는 국가와 시기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앞서 논의했듯이, 기간 효과와 코호트 효과를 비교한 연구들에 따르면 일관성 있게 기간 효과가 코호트 효과보다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출산 정책의 효과에 대한 연구는 직접적인 정책과 출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정책 간의 상대적 효과성에 대해서 일관성 있는 경험적인 증거를 제시해 주지 않는다. 이는 기간 효과가 지배적이라는 사실과 직접적인 출산 정책

과 간접적인 출산 정책의 상대적 효과성에 대한 논의는 별개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런데, 정책의 효과성 평가와 관련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정책의 효과를 측정하는 시간 단위의 문제이다. 직접적인 출산 정책의 경우에는 단기적인 출산율이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간접적인 출산 정책의 효과는 오랜 기간 동안 실행된 후에야 그 효과를 평가할 수 있다. 그렇지만, 장기적인 시계열 자료를 사용하지 못하는 연구들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출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출산 정책의 효과를 평가하는 것은 쉬운 작업이 아니다. 따라서 일-가정 균형과 관련된 정책의 효과에 일관성 있는 패턴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고티에의 평가는 이러한 자료의 한계를 부분적으로 반영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시간 단위의 문제는 출산력 변천과 관련된 연구에서도 중요한 쟁점이 되어 왔다. 집합 수준 자료를 주로 활용한 프린스턴 대학의 유럽 출산력 변천 연구(Princeton Fertility Project)는 사망력 변천이 출산력 변천보다 선행한다는 고전적인 인구변천 이론(classical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이 주장하는 핵심적인 패턴이 많은 국가들(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포르투갈) 등에서는 관찰되지 않음을 보여준 반면(Knodel, 1986; van de Walle, 1986), 개인 수준 자료를 활용한 최근의 연구들은 고전적인 인구변천의 이론과 일치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Reher and Sanz-Gimeno, 2007; Alter et al., 2007). 메이슨은 이러한 서로 상충되는 발견은 부분적으로는 서로 다른 시간 단위에 집중한 결과라고 해석하고 있다(Mason, 1997). 즉, 단기적으로 보면 출산력 하락이 사망력 하락에 선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는 사망력 하락이 출산력 하락의 전제조건이라는 고전적인 인구변천 이론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출산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데 중요한 시사점을

준다. 즉, 출산 정책의 효과성에 대한 평가의 시간 단위를 단기간으로 제한할 경우에는 그 효과성을 제대로 검증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이는 특히 간접적인 출산 정책의 효과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이슈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출산율의 반등을 경험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여성-친화적인 노동시장 환경이 발전되어 있고 일-가정 균형을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잘 확립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정책의 효과를 단기적인 시각에서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성평등주의의 확산은 출산 정책의 측면에서 보면 출산 환경에 영향을 주는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출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출산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는 기존의 연구들과 그 맥을 같이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는 그 특성상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 연구는 한국 출산력 조사 및 ISSP 자료를 활용하여 성평등주의의 확산이라는 출산 환경의 변화와 출산력 간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제 3 장

이론적 논의와 연구 가설

제1절 다중상태 평형이론

제2절 다중상태 평형이론과 생활양식 선호이론(Lifestyle Preference Theory)

제3절 미시-거시 연결을 위한 개념 틀과 연구 가설

제4절 연구 가설



3

이론적 논의와 연구 가설 <<

이 연구는 성평등주의와 출산율의 관계에 주목한다. 성평등주의의 발전은 사회경제적 발전의 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 연구는 앞서 검토한 사회경제적 발전과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연구와 그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앞서 지적했듯이, 최근 연구들은 사회경제적 발전과 출산율 간에 U자형 관계가 존재하고(Myrskylä et al., 2009),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국가별/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Billari and Kohler, 2004; Brewster and Rindfuss, 2000; Budig, 2003; Hisgeman and Butts, 2009; Kim, 2014; Kreyenfeld, 2010; Lee and Lee, 2014; Matysiak, 2009; Robert and Bukodi, 2005). 그렇지만, 이들 연구들은 이러한 전환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에 대한 만족스러운 설명을 제시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다중상태 평형이론(multiple equilibrium theory)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성평등주의의 발전이 왜 출산율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이론적/개념적 틀을 제공해 준다(Esping-Anderson and Billari, 2015). 또한, 하킴의 생활양식 선호이론(lifestyle preference theory)는 다중상태 평형이론에 근거한 출산율 변화를 설명하는 데 유용한 이론적 자원을 제공해 준다(Hakim, 2000).

제1절 다중상태 평형이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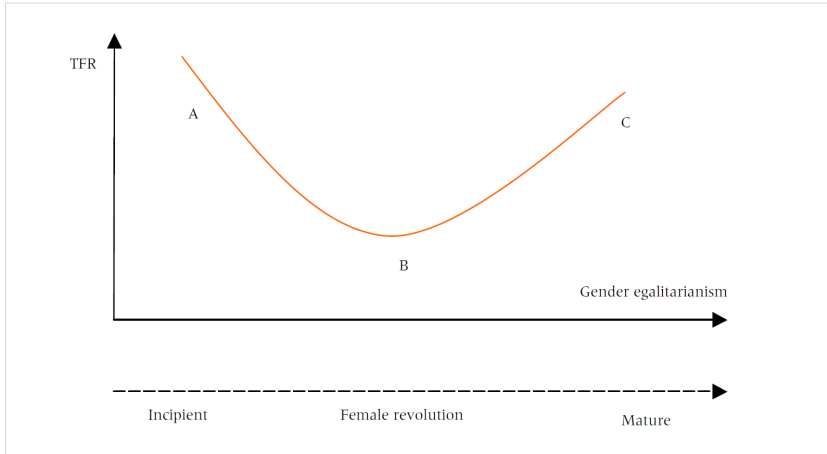
다중상태 평형이론은 우선 기존의 경제학적인 이론과 문화적 이론이

최근의 출산율 반등을 설명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한다. 베커로 대표되는 경제학적인 이론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증가로 가족 내 성별 분업에 따른 효용이 비용을 초과한 것이 혼인의 감소, 이혼의 증가, 출산율 감소의 중요한 원인으로 파악한다(Becker, 1973). 반면 제2의 인구변천 이론(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은 개인주의의 확산 등 문화적 변화를 출산율 하락의 주된 원인으로 파악한다(van de Kaa, 1987; Lesthaghe, 1995). 서로 다른 이론적 관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들 이론은 공통적으로 출산율이 하락한 이유에 대한 설득력 있는 설명을 제시한다. 그렇지만, 이러한 틀로 유럽 및 북미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최근의 출산율 반등을 설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들 지역에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과 동시에 출산율이 반등하고 있는 반면, 미시적 수준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출산율 간의 부정적 관계가 관찰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출산의 기회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베커식의 경제학적 모형은 이러한 현상을 설명하는 데 부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들 국가에서 개인주의적 경향은 퇴보하고 있다는 경험적인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우며, 결혼, 모성, 이상 자녀 수 등 가족 가치는 매우 안정적인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Scott and Braun, 2006). 개인주의의 확산이 출산율 하락의 주된 원인이라면 최근의 출산율 반등은 이러한 가치의 퇴보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문화적 이론 또한 최근의 출산율 반등을 설명하는데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다중상태 평형이론은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출산율 변화의 동적 메커니즘을 설명할 수 있는 대안적인 설명 틀을 제시해 준다. [그림 3-1]은 다중상태 평형이론에서 가정하는 성평등주의와 출산율의 관계를 단순화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은 성평등주의의 확산과 출산율 간에 U자형 관계가 존재한다고 가정한다. 즉, 성평등주

의가 확산되어 감에 따라 초기에는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일정한 임계점(tipping point)을 지나게 되면 성평등주의의 확산이 출산율의 반등으로 연결된다는 것이 다중상태 평형이론의 핵심적인 주장이며, 거시제도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기존의 인구학적 접근과 친화성이 있다(McDonald, 2002).

다중상태 평형이론은 기본적으로 확산이론(diffusion theory)에 따라 규범의 변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인데, 추상적인 이론적 가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Esping-Anderson and Billari, 2015, pp.8-21).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지배적인 규범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한 규범에 맞춰서 행동한다. 안정적인 평형 상태(stable equilibrium)는 이렇듯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규범에 따라 행동할 때 출현하고 재생산된다. 이때 전통적인(traditional) 집단은 구성원의 절대다수를 구성한다. 그런데 외부적 충격이나 내부적 변화로 인해서 기존의 규범과는 다른 행동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 규범의 혼란 등 불안정한 평형 상태(unstable equilibrium)가 출현한다. 즉, 사회 구성원들이 서로 상충하는 규범에 따라 행동할 수 있기 때문에 타인의 행동 혹은 본인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불안정한 상태를 경험한다. 이때, 사회의 구성원들은 자신들의 선호를 실현하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전통적인 집단의 절대다수가 새로운 규범을 수용하는 경우, 혹은 새로운 규범을 수용하는 집단이 소멸하는 경우에 해소된다. 즉, 새로운 규범이 확산(diffusion)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안정적인 평형 상태가 출현한다. 다중상태 평형이론은 이러한 과정의 반복으로 지배적인 규범 변화의 동학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3-1] 다중상태 평형이론에서 가정하는 성평등주의의 확산과 출산율의 관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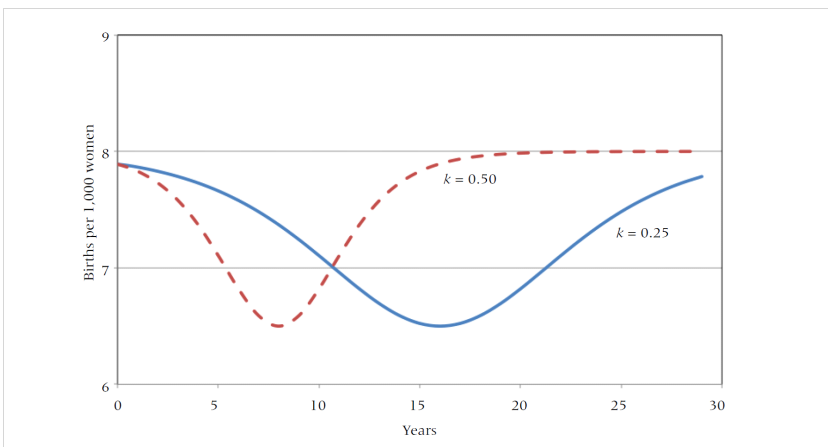


자료 : Esping-Anderson and Billari(2015). p.9.

이러한 논리를 성평등주의의 확산과 출산율 변화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대부분의 사회구성원들이 남성은 돈을 벌고 여성은 가정을 책임진다는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회를 가정한다. 둘째, 교육 기회의 확대나 다른 사회와의 접촉 등 외부적 충격(exogenous shock)이나 내부적인 변화(endogenous change)로 인해 평등적인 성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진 집단이 등장한다. 셋째, 성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진 집단의 비중이 확산된다. 이때 변화의 양상은 로지스틱 커브를 따른다고 가정된다. 즉, 성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진 집단의 비중이 초기에는 빠른 속도로 증가하다가 그 집단의 비중이 다수를 차지한 이후에는 증가 속도가 둔화된다. 이때 증가 속도를 결정하는 요인은 사회의 전반적인 신뢰 수준과 계층 간 통합 정도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전반적인 신뢰 수준과 계층 간 통합 수준이 높은 사회에서 새로운 가치관이 보다 빠른 속도로 전파될 수 있기 때문이다. 넷째, 이러한 확산 과정은 불안정한 평형 상태를 지나게 되는데, 이때 출산율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떨어

진다. 에스핑-앤더슨과 빌라리는 이 단계에서 전통적인 집단의 출산율에는 변화가 없고 성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진 집단의 출산율만 변화한다고 가정하는데(p.18), 이는 확산이론에 따르면 전통적인 집단은 평등적인 태도를 가질 가능성이 없거나(non-susceptible) 성평등주의적 태도에 노출된 적이 없는(not exposed) 집단이기 때문이다. 반면 성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진 집단의 출산율은 성평등주의 확산에 따라 변화하는데, 성평등주의적 태도를 지난 집단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의 출산율이 증가한다(p.19). 그 결과 성평등주의의 확산과 출산율은 [그림 3-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U자형 관계를 보여주게 되고, 그 변화의 속도와 양상은 신뢰 수준과 계층 간 통합 정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성평등주의가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경우에는 출산율의 하락 및 회복 역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반면, 성평등주의의 확산이 느린 경우에는 이와 같은 과정이 보다 완만한 속도로 진행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2]는 이러한 관계를 도식적으로 보여주고 있는데, k 값은 성평등주의의 확산 속도를 나타낸다.

[그림 3-2] 성평등주의의 확산에 따른 출산율 변화 패턴



자료 : Esping-Anderson and Billari(2015). p.19.

제2절 다중상태 평형이론과 생활양식 선호이론(Lifestyle Preference Theory)

다중상태 평형이론은 확산 모형(diffusion model)에 기반하여 성평등주의의 확산과 출산율의 변화를 설명하고자 한다. 규범의 변화를 새로운 규범이 사회구성원들에게 확산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설명한다는 점에서는 이 이론은 규범의 변화와 개인의 선호의 변화를 연결하여 설명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따라서, 다중상태 평형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작업은 성역할과 관련된 개인의 선호를 규정하는 작업을 요청한다. 이를 고려할 때, 생활양식 선호(lifestyle preference)를 여성의 성역할 태도, 직업 등을 설명하는 중심 변수로 사용하는 하킴의 선호이론(Hakim, 2000)은 다중상태 평형이론을 적용하는 데 중요한 이론적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다. 하킴에 따르면 피임 혁명, 남녀 간 기회 균등 혁명, 화이트 칼라 및 파트타임 직업의 확산, 개인주의적 가치관의 확산 등이 진행됨에 따라 현대 사회에서 여성이 자신의 삶의 조건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으며, 이에 따라 여성의 생활양식 선호가 가족 구성 및 출산에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Hakim, 2000). 하킴은 현대사회의 여성들은 일-중심적 여성, 가정-중심적 여성, 적응적 여성 등 세 가지 다른 형태의 생활양식 선호가 존재하며, 이러한 선호에 따라 교육 지속, 성역할 태도, 출산, 직업 선택 등이 다른 형태로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다.

다중상태 평형이론과 선호이론은 상호 보완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다중상태 평형이론의 경우 성평등주의의 확산에 따라 출산율이 어떻게 변화하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성평등주의의 확산은 선호 집단(preference group)의 상대적 비중의 변화와 연결된다. 성평등주의적 태도가 확산된다는 것은 결국 일-중심적 여성의 비중이 증가하고 가정-중심적 여성의 비중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킴의 선호 집단

구분을 활용하여 성평등주의의 확산 정도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 단, 두 개념적 틀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하는데, 이는 선호의 변화 가능성 여부이다. 다중상태 평형이론에 따르면 새로운 규범의 확산이 기존의 지배적인 규범을 대체할 수 있는데, 이는 생활양식 선호가 변화할 수 있음을 가정한다. 반면, 하킴의 이론은 기본적으로 선호의 안정성을 가정한다. 즉, 하킴은 대부분의 국가에서 일-중심적 여성과 가정-중심적 여성은 각각 20% 정도를 차지하고 적응적 여성은 60%를 차지한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여성의 선호는 상당 부분 고정된 것이며 변화 가능성이 낮다고 가정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여성의 선호의 형성에는 다양한 구조적, 규범적 요인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McRae, 2003; Tomlinson, 2006), 이는 생애 과정을 통해서 선호가 변화할 수 있고, 시간과 공간에 따라 선호 집단의 분포가 다를 수 있음을 함의한다.

선호이론의 또 다른 약점은 선호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이다. 생활양식 선호가 개인의 고유한 기질의 한 측면이라면, 이러한 가정은 유지될 수 있다. 그렇지만, 개인의 행동이 선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다(Crompton and Harris, 1998). 즉, 개인의 노동시장 참가 경험, 가족 형성 경험, 출산 경험 등이 생활양식 선호의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역인과성(reverse causality)이 존재한다고 가정한다면 생활양식 선호가 출산 및 경제활동 참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우회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생활양식 선호 자체가 아니라 선호실현(preference realization)에 주목하고자 한다. 생활양식 선호에 대한 측정은 개인의 성향뿐만 아니라 생애 과정의 경험을 반영하기 때문에 이를 표본조사 자료를 통해서 측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울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선호실현은 이보다 측정이 용이하다. 예를 들어, 표본

조사를 통해서 일-중심적 여성으로 구분된 여성은 몇 가지 척도에서 가정보다 직업에 중요성을 부여하는 여성이다. 이 여성은 일-중심적인 성향을 갖고 있을 수도 있고, 본래 성향은 가정-중심적이지만 여러 가지 환경의 영향에 의해서 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성향이 바뀌거나 자신의 성향을 잘못 인지하고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표본조사 자료를 통해서 이들을 구분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렇지만, 이 여성의 선호실현 정도는 현재 혹은 생애 과정을 통한 경제활동 경험을 통해서 비교적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다. 현재 직업을 갖고 있는 일-중심적인 여성은 자신의 선호를 실현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반대로 전업주부인 일-중심적인 여성은 자신의 선호실현에 실패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생활양식 선호와 경제활동 참가 형태를 교차시킴으로써 선호실현 여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표 3-1>은 이와 같은 유형화를 보여준다(김영미, 계봉오, 2015). 주대각선에 위치하는 유형은 생활양식 선호와 경제활동 참가가 일치하는 경우이며, 반대의 경우는 둘 간에 괴리가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유형 구분을 활용하여 생활양식 선호실현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검토함으로써 선호이론을 보다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표 3-1> 생활양식 선호실현 유형

생활양식 선호	경제활동 참가 여부	
	경제활동 참가	경제활동 비참가
일-중심적	선호실현	선호비실현
가정-중심적	선호비실현	선호실현

또한, 선호실현을 활용하는 것은 다중상태 평형이론을 검증에도 매우 유용하다. 우선, 선호실현의 상대적 비중은 성평등주의의 확산을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경험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김영미, 계봉오(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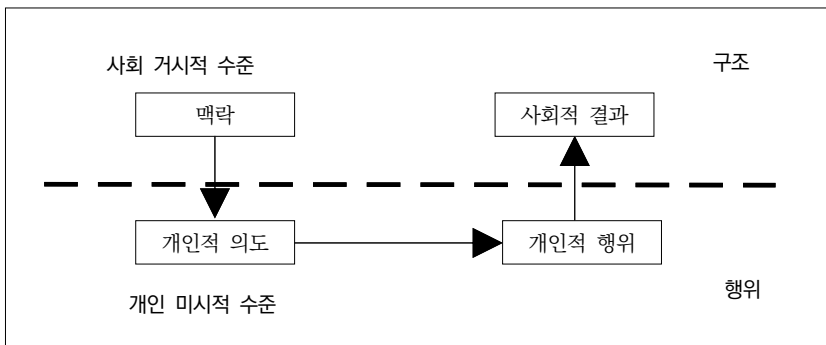
는 <표 3-1>의 유형과 2012 ISSP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 간 여성의 선호 실현 정도 차이를 비교했는데, 스웨덴, 미국 등 북유럽 및 북미 국가들은 선호실현 정도가 높고 한국, 스페인, 체코 등 동아시아, 남유럽, 동유럽 국가들의 선호실현 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활양식 선호의 실현 정도가 성평등주의의 확산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김영미, 계봉오(2015)는 국가 수준에서 측정된 선호실현도와 합계 출산율 상관관계 경제활동 참가율 등 다른 변수를 통제한 이후에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다중상태 평형이론에서 제시하는 성평등주의의 확산과 출산율 간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겠다. 이 연구에서는 보다 엄밀한 미시-거시 연계를 위한 다 수준 분석을 활용하여 이와 같은 접근을 확장하여 다중상태 평형이론과 선호이론을 결합한 모형이 한국의 출산율 변화와 국가 간 출산율의 차이를 설명하는 데 어느 정도 유용한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절 미시-거시 연결을 위한 개념 틀과 연구 가설

최근 인구학 및 사회학에서 미시적 수준을 고려하지 않는 거시 자료 분석에 바탕을 둔 인구 변동 논의에 문제 제기를 하는 연구자들이 증가하고 있다. 2009-2011년에 유럽 9개 연구기관의 컨소시엄으로 진행된 REPRO(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a macro-micro perspective) 프로젝트는 콜만(Coleman)의 방법론적 개인주의(그림 3-3)를 통해 거시와 미시를 연결시키는 분석 틀과 미시적 의사결정에 관한 사회심리학적 모형인 TPB(Theory of Planned Behavior, Ajzen, 1991)를 바탕으로 거시적 변수들이 개인의 출산 의도와 출산 행위에 미치는 영향, 그 결과 나타나는 인구학적 결과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

다고 주장하였다. 브린턴(Brinton, 2015) 역시 콜만의 분석 틀을 들여와 초저출산의 등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미시적 수준에서 개인들의 출산 의도가 행위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막는 거시적 조건들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며 특히 성역할 근본주의(gender essentialism)라는 규범적 조건이 미시적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마티시아크와 비놀리(Matysiak and Vignoli, 2012)는 가족 인구학 연구에서 거시와 미시를 “조화(reconciliation)” 시키기 위한 방법론적 제안들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시도들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거시와 미시로 양분되어 있었던 기존 경험 연구들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인구학적 결과(예컨대 초저출산으로의 진입 혹은 이탈)의 기제를 밝히는 새로운 형태의 경험 연구들을 낳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제는 이러한 시도들이 매우 초기 단계이며 일관된 이론적 관점에서 경험 연구들을 추동할 설득력 있는 가설들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출산에 대한 성평등주의적 접근에 기초하여 인구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거시적 영향 변수들과 미시-거시 연계 관계에 관한 논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3-3] 방법론적 개인주의의 사회적 결과에 대한 일반 이론 모형



자료 : Matysiak and Vignoli(2012). p.4 부분적으로 수정.

저출산에 대한 전통적 설명은 경제학적 관점(Becker, 1981)이든 문화적 관점(Lesthaeghe, 1995)이든 여성의 고용과 출산율 간의 부정적 관계를 예측해 왔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여성의 노동시장에서의 소득 기회가 커서 출산의 기회비용이 클수록 출산을 기피하게 되거나, 문화적 관점에서 보자면 개인주의적 생활양식으로의 변화로 인해 전통적 성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자기 실현의 욕구가 클수록 출산을 기피하게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많은 경험 연구들을 통해 여성 고용과 출산의 부정적 관계가 역사적인 현상일 뿐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여성 고용률과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의 부정적 관계가 90년대 이후 긍정적 관계로 전환되어 이제는 여성 고용률이 높은 국가들에서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이 높은 패턴을 나타내고 있다는 보고(Ahn and Mira, 2002; Rindfuss et al., 2003)를 시작으로, 좀 더 최근에는 HDI(Human Development Index)가 높은 국가들에서 TFR이 높다는 보고도 있다(Myrskylä et al., 2009). 20세기 초중반까지 여성들의 인적 개발이 진행되면 될수록 출산율이 낮아졌었다면 20세기 후반 이후로는 여성들의 인적 개발 및 사회 진출이 활발한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높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여성의 (의도적) 출산 결정에 기반이 되는 고용과 출산의 비용과 효용의 보수가 조정된 결과일 것이다. 그렇다면 그러한 변화를 초래한 사회적 조건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성평등적 접근은 성평등주의의 제도화, 규범화가 출산율의 회복 기저에 있는 중요한 사회적 조건임을 강조해 왔다(McDonald, 2000; Neyer, Lappegard, and Vignoli, 2011; Sleebos, 2003; Myrskylä, Billari and Kohler, 2011).

이러한 이론적 관점이 거시-미시를 연계하는 분석 틀 속에서 경험적 분석이 가능할 수 있도록 어떻게 재진술될 수 있을까? 여기서 핵심이 되

는 거시변수는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의 성평등주의의 제도화, 규범화 정도이며 이는 같은 사회적 맥락 속에 있는 개인들의 출산 의도 및 출산 행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성평등주의의 영향력은 분석적으로 두 가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첫째는 동일한 제도적 영향력하에 있는 모든 개인들의 출산 의도 및 출산 행위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다층분석 모형의 틀 속에서 보자면 이른바 절편 효과(intercept effect)이며, 둘째는 동일한 제도적 영향력하에 있는 개인들 중에서도 개인의 사회적 위치에 따라 영향력의 정도가 달라지는, 이른바 기울기 효과(slope effect)이다. 이 두 가지 측면 모두에서 성평등주의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력을 논의해 볼 수 있다.

우선 거시적 수준에서 성평등주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측정될 수 있을까.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적 요인들은 다양한 국가 간 비교 연구들을 통해서 규명되어 왔다. 그중에서도 여성의 경제활동, 임금 등 노동시장 변화(Ahn and Mira, 2002; Mira d'Ecole, 2005; Rindfuss et al., 2003), 출산 지원 정책 및 일-가족 양립 정책 등 제도적 변화(Gornick et al., 1997; Gauthier, 2002), 자녀 및 부모 역할에 대한 태도와 규범의 변화(Lesthaeghe and Van de Kaa, 1986; Frejka, 2008) 등 크게 노동시장 구조, 제도적 조건, 문화적 조건 등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거시변수들로 지목되어 왔다.

제4절 연구 가설

1. 국제 비교

가. 노동시장 조건

2000년대 초반 일련의 연구들(Ahn and Mira, 2002; Brewster and Rindfuss, 2000)이 OECD 국가 간 비교 연구를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출산율 간의 부정적이었던 상관관계가 1985년을 기점으로 긍정적인 상관관계로 전환되었다고 보고한 이후 여성 경제활동과 출산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거시 자료 비교에 의존한 방법론적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있었다(Kogel, 2004; Nieuwenhuis et al., 2012).²⁾ 여전히 서로 다른 방법론이 제기하는 경험적 사실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 중이나 성평등주의적 관점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출산율의 비선형적 관계를 예측한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최근 에스핑-앤더슨과 빌라리(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는 전통적인 확산 이론을 들여와 성평등주의의 확산과 출산율의 역동적 관계를 모형화한 다중평형 모형(multiple equilibria model)을 제시한 바 있다. 전통적 남성 생계부양자-여성 양육자 가족의 평형이 여성의 성역할 변화라는 외

2) 예컨대 코겔(Kogel, 2004)은 OECD 6개 국가의 시계열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개별 국가 수준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경제활동률과 출산율의 긍정적 관계로의 전환이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보고하였으며, 여성 경제활동과 출산의 긍정적 상관관계로의 전환은 일종의 착시이며, 80년대에 출산율이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여성 경제활동률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었던 지중해 국가들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일 뿐이라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뉴웬휘스(Nieuwenhuis et al., 2012)는 국가 간 비교를 통해 출산율과 여성 경제활동률의 긍정적인 관계가 나타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개인적 수준으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생태학적 오류이며, 18개 국가의 개인 수준 반복횡단면 서베이 자료(1975-1999)를 분석한 결과 개인 수준에서 출산과 고용의 부정적 관계는 시간에 지남에 따라 약화되기는 하였으나 긍정적으로 전환되지는 않았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

부적 충격으로 인해 불안정해지면서 새로운 가족 평형으로의 이행을 겪게 되는데 이러한 이행의 과정에서 출산율의 역동적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행의 초기에는 성평등주의가 확산될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다가 이행의 중기 이후에는 성평등주의가 확산될수록 출산율이 높아지게 된다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노동시장에서의 성평등주의의 대표적인 대리변수라면 경제활동 참여율과 출산율 간의 U자형의 관계를 예측해 볼 수 있다.

가설 1: 여성의 경제활동률이 증가하면 초기에는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나 임계점 이후 출산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선화하는 비선형적 영향을 미친다.

한편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하는 여성들과 남성들 간의 임금 격차도 노동시장 내 성평등주의 정도를 나타내는 또 다른 중요한 변수이다. 성별 임금 격차가 클수록 여성들이 고임금 일자리에 대한 접근에 제약을 겪고 있으며 장기 근속하여 커리어를 쌓아 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여성이라는 이유로 임금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영미, 계봉오(2015)는 이러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여성들의 선호실현을 가로막아 저출산의 조건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 바 있다. 노동시장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잔존하여, 여성이 고임금, 전문직 일자리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적고 저임금, 단순 서비스직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은 상황은 일-중심적 생활양식에 대한 선호를 갖고 있는 여성들(대부분이 고학력)의 취업 기회는 적은 반면 가정-중심적 생활양식 선호를 갖고 있는 여성들(대부분이 저학력)의 취업 기회는 많은 선호-기회 불일치 상황을 낳게 된다. 이 경우 고학력 여성들은 원하는 일자리를 얻을 때까지 출산을 미루거나 입직 후에도 일-가정 양립이 어려워 출산을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 기존 연구들을 통해 볼 때 미시적

수준에서 여성의 학력은 출산의 기회비용을 높여 출산에 부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경향성이 있다. 여기에 거시적 수준에서의 노동시장 조건, 특히 남녀 임금 격차로 대표되는 여성 경제활동 기회에서의 차별은 고학력 여성들의 출산 의도 및 출산 행위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

가설 2: 여성의 교육 수준과 출산의 부정적 관계는 남녀 임금 격차가 높은 사회일 수록 악화된다.

나. 제도적 조건

가족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오랜 기간 동안 많은 연구들이 축적되어 있으며 여전히 논쟁이 진행 중이다(리뷰는 Gottfried, 2011 참고). 최근에는 가족 정책의 성격에 따라서 출산 행동 혹은 출산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주장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남성 생계 부양자-여성 양육자의 성별화된 노동 분업을 지원하는 전통적 가족 정책(대표적으로 육아수당 등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과 성별 분업을 가정하지 않고 남녀 공히 생계부양자, 양육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가족 정책(대표적으로 육아 및 돌봄에 대한 공적 서비스 제공)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는 연구들도 계속 보고되고 있다. 21개 유럽 국가들을 대상으로 거시 가족 정책과 미시 출산 의도 간의 관계를 분석한 빌링슬리와 페라리니(Billingsley and Ferrarini, 2014)의 연구에 따르면 전통적 가족 정책과 ‘부양자-양육자 가족 지원책들(earner-carer family support)’ 모두 첫째아 출산 의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오직 부양자-양육자 정책들만 둘째아 출산 의도를 높이는 데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은 다른 연구들을 통해서도 지적되어 왔으며 (Gauthier, 2007; Blanchet and Eker-Jaffe, 1994), 22개국을 대상으로 한 고티에(Gauthier and Hatzius, 1997)의 연구는 가족수당을 25% 증가시켜도 출산율을 0.07명 증가시킬 뿐이라는 추정을 한 바 있다. 반면 돌봄 책임을 탈가족화하는 사회 서비스의 제공은 출산에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경험적 증거가 존재한다(Castles, 2003; Del Boca et al., 2007). 여전히 논쟁적인 이 연구들은 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출산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할 때 총량뿐만 아니라 종류를 구분하여 출산 효과를 측정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기존 연구들을 통해 볼 때 미시적 수준에서 여성의 취업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향성을 보인다(예외적인 사례로는 Kim, 2012; Matysiak, 2009). 또한 가족에 대한 공공지원은 이러한 취업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이때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과 서비스 지원은 취업 여성과 전업주부의 출산 의도 및 출산 행위에 다른 방식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전업주부의 경우 가정 내 무급의 돌봄노동이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이에 대한 경제적 보상이 직접적으로 주어질 경우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의도를 갖고 실행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취업 여성의 경우 육아수당 등 돌봄에 대한 현금 지원보다는 가정 내 돌봄노동을 대체하는 사회적 서비스가 제공될 때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많은 국가들에서 현금 지원이 육아수당의 형태로 주어져서 전업주부로 수당 취득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것도 여성의 취업 상태에 따라 가족 정책의 효과성이 선택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성을 강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가설 3: 여성의 취업과 출산의 부정적 관계는 양육에 대한 공적 서비스가 발달한 사회일수록 완화된다.

다. 문화적 조건

에스핑 앤더슨과 빌라리(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의 다중상태 평형이론은 전통적 성역할 분업의 가족 규범이 만연해 있던 사회가 외부적 충격이나 내부적 변화(예컨대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율의 증가)로 전통적 규범과는 다른 행동양식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면, 사회구성원들이 서로 상충하는 규범에 따라 행동하여 타인의 행동 혹은 본인의 행동에 대한 타인의 반응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은 불안정한 평형 상태에 들어서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때 특히 성평등주의적인 새로운 규범을 수용한 여성들이 파트너를 만나거나 안정적 관계에 대한 예측 속에서 출산을 결정하기가 어려워져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경향성을 보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불안정성은 남성을 포함한 인구의 절대다수가 새로운 규범을 수용하면서 서서히 해소될 수 있는데, 결국 성평등적 사회로의 이행 속도는 여성들이 성평등적 의식을 가진 남성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얼마나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Breen and Cooke, 2005; 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회 전체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남녀 간 문화적 차이는 여성의 출산 의도 및 출산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아피노 등(Arpino et al., 2015, pp.3-4)은 성평등 의식의 남녀 간 격차가 큰 상황에서는 비전통적인 여성들이 협력적인 남성을 만나기 어려워 결혼, 출산을 기피하는 회피(exit) 전략이나 자신의 진정한 선호를 단념, 재조정하는 충성(loyalty) 전략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는데, 이때 회피 전략이 지배적으로 나타날 경우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충성 전략이 지배적인 경우 역시 단산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한다. 이때 남녀 간 성평등 인식의 격차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집단은 성평등주의적 태

도를 갖고 있는 여성일 것으로 예측된다. 에스핑-앤더슨과 빌라리(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pp.18-19)는 성평등주의 확산이 진행되면 전통적인 집단의 출산율에는 큰 변화가 없고 성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진 집단의 출산율만 변화한다고 가정하는데, 이는 확산이론에 따르면 성평등주의적인 집단만이 그러한 태도에 수용적인 파트너 집단이 증가함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가설 4: 여성의 성평등주의적 성역할 태도와 출산의 부정적 관계는 성역할에 대한 남녀의 인식 격차가 적은 사회일수록 완화된다.

2. 한국의 출산율 변화

위에 논의한 연구 가설들은 국가 간 출산율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가설들인데, 한국의 출산율 변화를 성평등주의적 입장에서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가설들을 다소 변형할 필요가 있다. 성평등주의적 접근과 선호이론에 따라 이 연구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와 성평등주의적 인식을 출산 의도 및 행위를 설명하는 중심 변수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수들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에 따라 조절된다고 가정한다. 이때, 거시적인 사회경제적 환경은 거주 지역의 성평등주의 발전 정도로 측정한다. 거주 지역의 성평등주의 발전 정도의 측정에 대해서는 5장에서 보다 자세히 기술한다. 또한 경제활동 참가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성평등주의적 인식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데, 이는 <표 1>에 제시한 것처럼 여성의 선호실현이 출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을 발전시킬 수 있다.

가설 5: 한국에서 여성의 성평등주의적 태도와 경제활동 참가는 초기에는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그 부정적인 영향은 점차 약화된다.

가설 6: 한국에서 여성의 성평등주의적 태도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경제활동 참가 상태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며, 이러한 상호작용 효과는 시기에 따라 변화한다.

가설 7: 한국에서 여성의 성평등주의적 태도와 경제활동 참가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거주 지역의 성평등주의적 태도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난다.



제 4 장

자료와 방법론

제1절 국제 비교

제2절 한국 출산력 조사(1991-2015)

제3절 통계 모형: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

제4절 방법론적 제약과 해석상의 유의점



제1절 국제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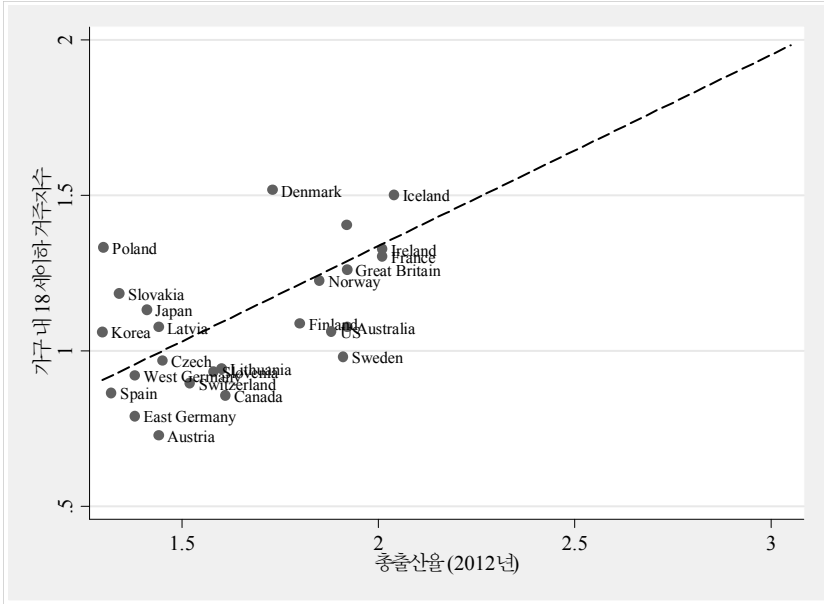
다층분석 방법이 적용될 이 연구는 개인 수준의 자료와 국가 수준의 자료가 필요하다. 개인 수준 자료는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ISSP) 2012년 가족 및 변화하는 성역할(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 모듈을 이용한다. ISSP는 총 40개 국가들에서 확률표집을 통해 전국적 대표성이 있는 표본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조정된 설문을 통해 개인 단위 정보를 수집한다. 표본 크기는 중국을 제외하면 국가별로 대략 1,000-2,500 사이이며 중국은 6,000여 케이스로 예외적으로 크다. 국가 수준의 거시변수들은 대부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가족 데이터베이스(Family Database)에서 구하였으며, OECD 데이터베이스에서 누락된 국가들의 정보는 세계은행(World Bank) 젠더 통계 데이터베이스(Gender Statistics Database)를 통해 보완하였다. 거시변수들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없는 국가들, 대부분 저개발 국가들인 19개 국가들은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최종 분석 국가는 21개국이며 오스트레일리아, 오스트리아, 체코,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일본, 한국, 멕시코, 노르웨이, 폴란드,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터키, 미국, 독일, 영국을 포함한다. 표본은 20-45세의 가임기 여성으로 제한하였다.

분석 대상은 자녀 수 분석에서는 이상 자녀 수와 거주 자녀 수로 구분하여 각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상 자녀 수는 ISSP 문항 중 한 가족에게

이상적인 자녀 수는 몇 명인지를 묻는 문항을 이용하였다. 이때 극단값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10인 이상으로 응답한 경우(95 사례)는 모두 10인으로 재조정하여 최대값은 10이다.

여기서 더 중요한 종속변수는 거주 자녀 수이다. ISSP는 두 가지 질문을 통해 자녀 수를 묻고 있다. 하나는 가구 내 거주하고 있는 1세-학령기(school age)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몇 명인가 하는 질문이고 다른 하나는 가구 내 거주하고 있는 학령기-18세 사이에 해당하는 아이들이 몇 명인가 하는 질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 두 질문의 응답을 합산하여 가구 내 거주하고 있는 1-18세 아이들 수를 자녀 수의 대리(proxy)변수로 이용한다. 이 문항은 여성 응답자가 실제 출산한 자녀 수를 묻는 문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 변수를 자녀 수의 대리변수로 사용할 때 생기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예컨대, 거주하는 18세 이하 영유아, 청소년이 본인이 출산한 자녀가 아니라, 입양 자녀이거나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일 수 있으며 친척의 자녀가 장기 거주하고 있는 경우일 수도 있다. 또한 응답자가 출산한 자녀가 이혼한 배우자와 동거하게 하거나 친척 집에 보내는 등 다른 곳에서 거주하게 하고 있을 수도 있다. 또한 사망한 자녀는 포함되지 않는다. 이렇듯 실제 출산 자녀 수와 거주 자녀 수 간의 불일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는 결혼제도가 안정적이지 않고 이혼율, 재혼율이 높은 사회에서 더 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를 반영하여 분석에서 결혼제도의 안정성을 통제하기로 하였다. 국가 수준에서 볼 때 ISSP 자녀 수의 국가별 평균과 총 출산율과의 상관관계는 상관계수(unweighted zero-order correlation) 0.77로 높은 편이지만(그림 4-1), 이러한 문제점을 고려하여 거주 자녀 수 변수를 출산 자녀 수의 대리변수로 이용할 때는 신중해야 하며 총 출산율과 등치되어 해석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림 4-1] ISSP 거주 자녀 수와 총 출산율의 상관관계



그림에도 불구하고 이 변수는 가설 검정을 위한 목적으로 제한적인 유용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현재 출산에 관한 연구방법이 주로 사건사 분석을 통한 출산 확률 혹은 출산 시기 분석에 치중되어 있는바, 사건사 분석의 방법론적 강점은 무수히 많으나 국가 간 비교 분석이 어렵다는 점은 약점 중에 하나이다. 비교 가능하게 구축된 국가별 패널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자료의 제약이 심하며 다층 사건사 분석의 방법론적 발전도 필요하다. 아직까지 출산에 대한 미시-거시 분석이 매우 드문 이유이다 (Philipov et al., 2009, p.66). 물론 궁극적으로는 데이터베이스와 방법론적 발전을 통해 다층 사건사 분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다양한 방식으로 미시-거시 상호작용에 대한 가설들을 제시하고 검증하고 경험적 경향성들을 발견해 나가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러

한 점에서 볼 때 거주 자녀 수 변수는 현재 개발되어 있는 다층분석 방법론을 적용하기에 적합하며 직관적으로 명료한 해석이 가능하여 가설 검정을 하기에 유용하다. 거주 자녀 수가 각 국가의 가족 구성, 분가 풍습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자녀 수에 대한 거시변수의 절편 효과(국가 간 차이)를 측정하는 데 오류가 있을 수 있으나 기울기 효과 즉 각 국가 내 개인변수들과 거시변수들 간의 상호작용(개인 간 차이의 국가 간 비교)을 측정하는 데는 오류가 적을 것이라고 본다.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는 개인 수준의 독립변수들은 연령, 혼인 상태, 교육, 고용 상태, 성역할 태도이다. 연령은 여성의 연령이 많을수록 거주 자녀 수가 많을 것이나 자녀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집을 떠나는 자녀들이 생겨 자녀 수와 비선형적 관계를 가질 것이 기대되어 연령 제곱항을 추가하였다. 혼인 상태는 기혼을 기준 범주로 하여 이혼/사별 상태를 지시하는 더미변수와 미혼 상태를 지시하는 더미변수로 반영하였다. 교육은 교육을 받은 연수로 측정하였으며 각 국가의 평균으로 중앙화(centering)하였다. 고용 상태는 취업 상태를 지시하는 더미변수(0=미취업, 1=취업)로 측정하였다. 성역할 태도는 “남성의 일은 가계부양, 여성의 일은 집안에서 살림이라는 진술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라고 묻고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한 문항을 이용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뚜렷한 성역할 분담에 동의하지 않는 성평등주의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거시-수준의 독립변수들은 크게 제도적 변수들과 노동시장 변수들, 그리고 문화적 변수로 구분된다. 제도적 변수들은 양육과 돌봄을 지원하는 가족 정책들의 발전 정도를 측정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가족 정책은 전통적 가족 정책과 부양자-양육자 지원 정책으로 구분해서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것이다. 전통적 가족 정책은 양육자로서의 여성의 무급노동에 대한 공적 인정의 형태로 실현될 수 있으며 이는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family cash benefits), 즉 3-12세 아동에 대한 현금수당(세금 크레딧 포함)이 공적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될 수 있다. 부양자-양육자 지원 정책은 사회화된 돌봄서비스의 형태로 실현될 수 있으며 이는 가족 서비스(family service), 즉 양육 지원 사회 서비스가 공적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될 수 있다. 두 변수 모두 2011년 기준 OECD Family database의 자료를 적용하였다.

노동시장 변수들은 여성의 노동시장 상황을 측정하는 것으로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남녀 임금 격차와 여성 단시간 근로자 비율 변수를 포함한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변수는 2011 OECD family database 자료를 이용하였다. 각국의 남녀 임금 격차는 OECD family database에 있는 남성 대비 여성 임금 비율 변수를 이용하여 $100 - (\text{여성 평균임금} / \text{남성 평균임금})$ 으로 변형하여 값이 클수록 남녀 임금 격차가 큰 국가이다. 단시간 근로는 총 여성 고용 중 단시간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였다. 일본, 한국, 네덜란드, 미국은 2011 World Bank Gender Statistics Database에서, 나머지 국가들은 2011 OECD Family Database의 자료를 적용하였다.

문화적 변수는 성평등주의의 문화가 확산된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성역할 인식에서의 남녀 간 인식의 격차로 측정하였다. ISSP 서베이 문항 중 “남성의 일은 가계부양, 여성의 일은 집안에서 살림이라는 진술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 5점 리커트 척도(높을수록 성평등주의적인 태도)로 측정된 문항의 국가별 여성 평균에서 국가별 남성 평균을 뺀 값이다. 값이 클수록 성평등주의적 인식에서의 남녀 간 격차가 큰 것이다.

여기에 더해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결혼제도의 안정성 변수를 통제 변수로 추가하였다. 이는 혼인 상태를 묻는 문항에 대해 시민적 파트너십 관계에 있다고 응답하거나, 혼인 혹은 파트너와 별거 상태, 이혼 상태에

있다고 응답한 이들이 각국의 전체 표본(가임기 여성으로 제한된 본 연구의 표본이 아닌 전체 표본을 의미함)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측정하였으며 이 비율이 높을수록 결혼의 제도로서의 안정성이 낮은 것이다.

제2절 한국 출산력 조사(1991-2015)

한국 출산력 조사 자료 분석의 경우에 성평등주의를 측정하기 위해서 두 가지 변수를 활용한다. 2012년과 2015년 자료의 경우에는 ISSP 자료와 동일한 질문인 “남성의 일은 가계부양, 여성의 일은 집안에서 살림이라는 진술에 얼마나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이 질문에 대한 응답을 기준으로 유배우 여성의 성평등주의적 의식 정도를 측정한다. 그런데, 2012년 이전의 한국 출산력 자료는 이와 같은 성역할 태도와 관련된 질문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보다 장기적인 시계열 변화를 추적하기 위해서 이 연구는 아들 선호 변수를 성역할 태도의 대리변수로 활용한다. 아들 선호는 “아들이 꼭 있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측정하는데, “없어도 된다”, “있으면 좋다”, “있어야 한다”는 세 가지 응답 범주를 갖고 있다. 이 질문은 1991-2015년 자료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시계열 변화를 추적하는 데 좋다. 이 연구에서는 강한 아들 선호(있어야 한다)가 성평등주의에 반하는 것으로 가정한다. 물론 아들 선호는 성평등주의적 가치관 이외에도 다른 요인들을 포함하는 개념이므로 이러한 가정은 완전히 정당화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 선호가 성평등주의적 태도와 서로 상충하는 개념임을 쉽게 수긍할 수 있는 사실이다. 또한 이 연구는 아들 선호 점수의 조사구 평균을 그 지역의 성평등주의적 가치관에 대한 측정치로 활용한다. 출산력 조사의 조

사구는 대체로 50개 내외의 가구를 포함하고 있으며 읍/면/동 단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웃(neighborhood) 개념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따라서 이러한 방법은 조사 대상자가 거주하는 지역의 성평등주의의 발전 정도를 측정하는 데 유용하다. 또한 이러한 방법은 다수준 모형을 적용한 고전적 연구라 할 수 있는 콜만 등의 연구(Coleman, 1987)에서 학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의 학교 평균을 아이들의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포함한 것과 유사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들 선호 점수의 조사구 평균과 유배우 여성의 개별적인 특징인 교육 수준, 취업 여부, 아들 선호 등의 상호작용항(cross-level interaction terms)을 포함하는 모형을 추정함으로써 지역 수준의 성평등주의 발전 정도가 특성이 개인의 특성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출산 변수로는 총 출생아 수와 향후 출산 의도를 사용한다. 총 출생아 수는 현재까지의 출산 행위를, 출산 의도는 향후 출산 가능성에 대한 측정치라 할 수 있는데, 이들 측정치와 관련된 내용을 4절에서 보다 자세히 기술하도록 한다. 유배우 여성 및 남편의 연령 및 교육, 혼인 기간을 통제 변수로 포함했다. 가구 소득, 재산 등 가구 수준의 다른 변수들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지만, 1990년대 초중반 자료가 이들 변수들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전체 분석에서는 제외했다. 단, 성역할 태도에 대한 직접적인 측정치를 활용하는 2012년과 2015년 자료의 분석에서는 이들 변수를 통제 변수로 포함했다.

제3절 통계 모형: 다수준 분석(Multi-level Analysis)

연구 방법으로는 다수준 분석을 활용했다(Rabe-Hesketh and Skrondal, 2012). 국제 비교 연구의 종속변수인 거주 자녀 수와 이상 자녀 수의 분석은 혼합효과 선형 모형(Mixed-effects linear model)을 활용했으며, 한국 자료 분석의 경우에는 출생아 수 분석의 경우에는 다수준 포아송 모형(Multi-level Poisson model)을, 출산 의도 분석의 경우에는 다수준 로짓 모형(Multi-level logit model)을 활용했다. 다수준 로짓 모형의 기본 모형을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E[\ln(p/(1-p))] = \alpha_j + \beta_{kj} \times PR_{kij} + \gamma^k(\text{Control}_{lij}) \dots\dots\dots (1)$$

$$\alpha_j = \alpha + u_{\alpha j}, \quad u_{\alpha j} \sim N(0, \sigma_{\alpha}^2) \dots\dots\dots (2)$$

$$\beta_{kj} = \beta_k + u_{\beta kj}, \quad u_{\beta kj} \sim N(0, \sigma_{\beta k}^2) \dots\dots\dots (3)$$

(i: 개인, j: 집단 (국가 혹은 시기), PR: <표 3-1>에 제시한 선호실현 (preference realization) 유형, Control_{kij}: 집단 j에 속한 개인 i가 갖는 통제 변수값)

국제 비교 분석의 경우에는 개인 수준의 변수로는 본인의 연령, 혼인 상태, 교육, 취업 상태, 성역할 태도를 포함하고, 국가 수준의 변수로는 1인당 GDP,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의 제곱, 남녀 임금 격차, 공공지출에서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 가족 서비스가 차지하는 비율, 남녀 간 성역할 인식의 격차 등을 포함한다. 한편 한국 출산력 조사자료 분석의 경우에는 앞서 기술했듯이 유배우 여성 및 남편의 연령, 혼인 기간, 교육 수준 등을 통제 변수로 포함한다.

또한 이 기본 모형을 확장하여 국가 수준의 변수들과의 상호작용항을 투입한 모형을 통해서 노동시장, 가족복지, 문화적 성평등주의 등 국가의 맥락적 조건이 교육, 취업, 성역할 태도 등 개인 수준의 변수들이 거주 자

녀 수 및 이상 자녀 수에 미치는 효과를 어떠한 방식으로 조절하는지 살펴 보도록 한다. 한국 출산력 조사자료 분석의 경우에는 거주 지역의 아들 선호 평균으로 측정된 지역 수준의 성평등주의 정도와 개인 수준 변수 간의 상호작용항을 포함한 모형을 추정한다.

제4절 방법론적 제약과 해석상의 유의점

이 연구의 중요한 한계는 추정된 계수들을 인과관계로 해석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만약 현재의 선호 및 선호실현이 생애 과정을 통해서 변화하지 않는 개인의 타고난(innate) 특성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면 인과적인 해석이 가능하지만, 혼인 및 출산의 경험이 이들의 선호 및 선호실현 여부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즉, 역인과성의 문제에서 이 연구는 자유로울 수 없다. 시간적 순서를 고려할 때에도 현재 상태의 선호와 선호실현이 주로 과거에 이루어진 출산 및 초혼에 영향을 주었다고 가정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위의 모형들에서 얻을 수 있는 추정치들은 선호실현이 출생아 수에 미치는 효과(effect)를 나타낸다고 해석할 수 없고, 다른 변수들을 통제한 상태에서의 상관관계(association)을 나타낸다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정책적 함의를 어느 정도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선호실현과 출산 사이에 매우 강한 관계를 발견한다고 해도 이를 선호실현에 대한 정책적 개입이 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에는 이를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형들을 통해서 얻어진 추정치들은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가질 수 있다고 판단한다. 앞서 지적했듯이 출산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현금 이전 등의 정책의 효과 유무는 자료를 통해 비교

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렇지만 출산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간접적인 인구 정책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다. 특히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이를 확인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의 주제인 성평등주의는 이러한 간접적인 인구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종단 자료(longitudinal data), 특히 한 개인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패널 자료(panel data)를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적합한 패널 자료를 확보하는 것은 또 다른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하는 작업이고, 패널 자료를 통해서 여러 기간 및 코호트의 변화를 확인하는 것 또한 어려운 작업이다. 따라서, 비록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횡단면 자료를 이용한 분석을 활용하여 간접적인 인구 정책과 출산의 관계를 살펴보는 것은 충분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한다. 특히 여러 시점 혹은 여러 국가에서 수집된 횡단면 자료를 활용하여 시기별/국가별 차이를 탐구하는 것은 간접적인 정책의 효과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이 연구에서 활용하고 있는 다층분석(multi-level analysis)은 거시적 변인과 개인수준 변인의 관계를 동시에 규명하기에 적합하다. 다중상태 평형이론은 기본적으로 거시적 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성평등주의와 출산율 모두 거시적 수준에서 측정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성평등주의의 확산이나 출산율의 변화 모두 개인 수준의 태도와 행위의 변화를 수반하는 개념이므로 거시적 변인과 개인 수준 변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이 이론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해서 필수적이다. 다층분석 모형은 국가 수준의 성평등주의 정도, 경제발전 정도 등 거시적 변인과 개인의 선호 및 출생아 수/혼인 연령 등 개인 수준 변인을 모두 고려하므로 이를 위해서 적합한 모형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다

층분석을 활용함으로써 거시적 이론이 간과하기 쉬운 개인들의 이질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일례로 다중상태 평형이론의 단순 모형은 성평등주의적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출산율은 기본적으로 동질적인 것으로 간주하고,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의 출산율 또한 동질적인 것으로 가정한다(Esping-Anderson and Billari, 2015, p.18). 그렇지만, 이들 사이에 이질성이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은 분명히 존재한다. 선호실현 여부는 이러한 이질성을 포착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성평등주의적 가치관을 갖고 있는 두 여성 중 한 여성은 본인의 선호를 실현하여 경제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반면, 다른 여성은 본인의 선호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들의 출산율 차이는 비슷한 가치관을 갖고 있는 여성들 내부의 이질성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다층분석을 활용하여 이들 간의 출산율 차이와 거시적 수준에서 성평등주의의 확산 정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다중상태 평형이론이라는 거시적 수준의 이론을 미시적 수준의 이질성을 고려하면서 검토하고자 한다.

또한, 한국 출산력 조사 자료 분석은 유배우 여성의 출생아 수와 출산 의도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한국 사회에서 비혼 출산의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확인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분석에는 한계 또한 존재한다. 이 연구의 분석 결과를 한국의 출산 변화에 직접적으로 연결하기는 어렵다. 이철희(2012)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1980년대 이후 한국의 출산율 변화는 유배우 출산율의 변화가 아니라 혼인율의 변화에 의해서 대부분 설명된다. 따라서, 유배우자들의 출산을 분석하는 이 연구를 활용해서 전반적인 출산율 변화를 설명할 수는 없다.

이 연구는 출생아 수와 더불어 출산 의도를 종속변인으로 사용한다. 출

산 의도 분석은 출생아 수 분석이 갖는 문제(인과관계 설정의 어려움)로부터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할 수 있다. 즉, 여성의 현재 특성(노동시장 참가 및 성역할 태도)이 미래 출산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는 것은 자연스럽다. 출산 의도 분석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출산 의도와 출산 행위 사이에 존재할 수 있는 간극이다. 출산을 원한다고 해서 모두 출산하는 것은 아니며, 원하지 않는 출산 또한 존재한다. 선행 연구들은 출산 의도가 향후 출산 행위를 예측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지만(Brinton, 2015), 원칙적으로 의도와 행위 간에는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한계를 염두에 두고 분석 결과를 해석하도록 한다.

제 5 장

결 과

제1절 국제 비교

제2절 한국 출산력 조사 분석 결과



제1절 국제 비교

〈표 5-1〉은 분석에 포함된 21개 국가들의 기술통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의 왼쪽 칼럼은 20-45세 여성들로 제한한 표본에서의 개인 수준 변수들의 국가별 평균이다. 이상 자녀 수는 체코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가들에서 2명을 넘고 있으며 아일랜드가 2.93명으로 가장 높되 3명을 넘어서는 국가도 없다. 기존 연구들에서 여러 번 밝혀진 것처럼 이상 자녀 수는 대부분의 사회에서 2-3명으로 규범화되어 있으며 국가 간의 차이도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거주 자녀 수는 국가 간 차이가 상당히 큰 편이다. 오스트리아가 0.73명으로 가장 낮으며 멕시코가 1.65명으로 가장 많다. 오스트리아, 체코,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위스, 독일 등 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동유럽 및 남유럽 국가들이 거주 자녀 수가 1명 이하로 적은 편이다. 예외적으로 스웨덴은 저출산 국가가 아니면서도 거주 자녀 수가 1명 이하로 적다. 이는 결혼의 제도로서의 안정성이 낮은 사회의 특징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나 실제 그러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분석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다. 반면 덴마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프랑스 등 출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알려진 국가들이 거주 자녀 수가 1.3명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한편, 저출산 국가에 속하는 폴란드의 평균 거주 자녀 수가 1.33명으로 많은 편이라 예외적이다.

평균 연령은 32-34세로 큰 차이가 보이지는 않는다. 이 연령대 여성들 중에서 사별 혹은 이혼한 비율은 국가 간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호주의

경우 3%에 그치고 있는 반면 체코, 미국은 17% 정도가 사별, 이혼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령대의 사망률을 고려해 본다면 대부분은 이혼 상태일 것으로 짐작된다. 한편 미혼 비율 역시 큰 변이를 보여주고 있다. 멕시코, 오스트리아, 폴란드, 슬로바키아, 아이슬란드 등에서는 미혼 비율이 30%를 밑돌고 있는 반면 스웨덴, 영국, 노르웨이, 핀란드 등에서는 50%를 넘어서고 있다.

이 연령대 여성들의 평균 교육 연수는 10.6년인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모두 12년, 즉 평균 고졸 이상의 학력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국가 간 변이는 의외로 큰 편이다. 오스트리아, 일본, 한국, 슬로바키아, 스위스, 미국, 독일, 영국, 체코 등이 평균 14년 미만이며, 호주, 핀란드, 프랑스,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등이 평균 15년을 초과하고 있다. 성평등주의적 태도 역시 국가 간 변이가 상당히 있는 편이다. 체코, 멕시코, 슬로바키아 등이 성역할 분담을 긍정하는 전통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반면, 노르웨이, 스웨덴, 아이슬란드, 프랑스, 핀란드, 덴마크, 호주 등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여성들이 매우 강하게 성역할 분담 담론에 동의하지 않는 성평등주의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들의 비율은 한국이 54%로 가장 낮고 호주, 오스트리아, 프랑스, 노르웨이 등에서 80%를 넘기고 있다.

〈표 5-1〉의 오른쪽 칼럼은 국가 수준 변수들의 기술통계를 정리한 것이다. 1인당 GDP/1000 값은 멕시코가 9.82로 가장 낮고 노르웨이가 99.64로 가장 높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전체 경제활동 가능 연령대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이며 한국이 55.78%로 가장 낮고 노르웨이가 86.36%로 가장 높다. 남녀 임금 격차는 스페인, 폴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등이 10% 포인트 이하(여성 평균임금이 남성 평균임금의 90% 이상)로 낮은 편이며 한국이 39.6% 포인트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제도적 변수들의 국가별 기술통계를 보면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을 많이 하는 국가들은 아일랜드, 영국, 오스트리아 등이며 가족 서비스 지원을 많이 하는 국가들은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등이다.

문화적 변수에서 성역할 분담에 대한 남녀 간 인식의 차이 역시 국가 간 변이를 상당히 보여주고 있다. 인식의 차이가 큰 국가들, 즉 여성에 비해 남성의 성역할 의식이 훨씬 전통적인 국가들은 노르웨이, 핀란드, 스웨덴, 호주, 폴란드, 스페인 등이다. 상대적으로 남녀 간 인식의 차이가 적은 국가들은 영국, 프랑스, 아이슬란드, 일본, 미국, 독일 등이다.

통제 변수로 결혼제도의 안정성을 측정하기 위해 만든 혼외관계 비율, 즉 전체 인구 중 시민적 파트너십, 별거, 이혼 상태에 있는 이들의 비율 변수 역시 국가 간 변이가 상당히 크다. 일본과 한국은 5% 정도로 매우 낮은 반면 아이슬란드, 슬로베니아, 미국, 스웨덴, 프랑스, 영국 등은 15%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가족주의가 강한 것으로 알려진 나라들, 동아시아, 남유럽, 동유럽 등에서 혼외관계 비율이 낮은 편이다.

(표 5-1) 나라별 기술동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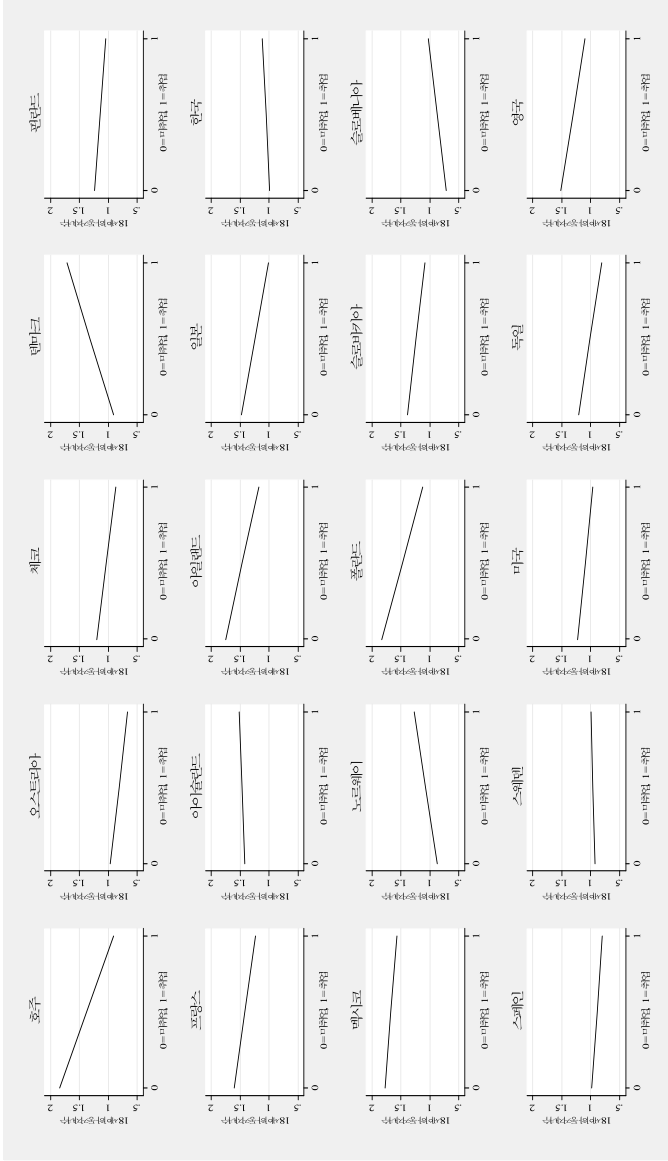
	개인 수준 변수 평균										국가 수준 변수				
	이상 지녀 수	거주 자녀 수	연령	사별/ 이혼	미혼	교육 연수	성평등주의적 태도	취업	1인당GDP/ 1000	여성 경험률	남녀 임금격차	현금 지원	가족 서비스	남녀 인식차이	혼외 관계
호주	2.52	1.08	34.23	0.03	0.42	15.31	4.16	0.82	67.51	78.19	14.00	1.90	0.90	0.39	0.11
오스트리아	2.18	0.73	32.22	0.10	0.28	12.03	3.49	0.80	48.35	76.99	19.20	2.00	0.60	0.20	0.13
체코	1.99	0.97	33.91	0.17	0.31	13.22	2.89	0.70	19.67	69.76	15.90	1.00	0.50	0.24	0.14
덴마크	2.42	1.52	33.54	0.10	0.47	14.31	4.63	0.75	57.64	76.09	8.90	1.60	2.40	0.20	0.11
핀란드	2.42	1.09	32.99	0.06	0.51	15.52	4.27	0.77	47.24	73.55	18.90	1.60	1.60	0.31	0.09
프랑스	2.38	1.31	34.52	0.10	0.36	15.70	4.49	0.80	40.93	77.16	14.10	1.60	1.40	0.14	0.18
아이슬란드	2.82	1.50	32.59	0.05	0.26	17.02	4.45	0.78	44.22	78.54	14.30	1.20	2.30	0.17	0.21
아일랜드	2.93	1.33	36.39	0.04	0.35	16.80	4.24	0.74	48.39	68.94	12.80	2.90	1.00	0.21	0.09
일본	2.54	1.13	34.80	0.05	0.34	13.71	3.83	0.74	46.68	68.99	28.70	0.90	0.50	0.11	0.05
한국	2.44	1.06	34.14	0.04	0.34	13.96	3.60	0.54	24.45	55.73	39.60	0.10	0.90	0.26	0.05
멕시코	2.26	1.65	32.04	0.12	0.25	10.60	2.82	0.63	9.82	58.68	11.60	0.40	0.70	-0.03	0.08
노르웨이	2.50	1.23	32.90	0.08	0.51	15.27	4.55	0.87	99.64	86.36	8.10	1.30	1.80	0.44	0.12
폴란드	2.45	1.33	32.82	0.10	0.28	14.13	3.41	0.70	12.88	64.54	7.20	0.80	0.60	0.43	0.06
슬로바키아	2.19	1.18	34.03	0.09	0.26	13.89	2.72	0.67	17.15	66.02	14.90	1.60	0.40	0.19	0.10
슬로베니아	2.40	0.93	32.82	0.05	0.33	14.30	4.04	0.69	22.49	64.13	11.60	1.60	0.50	0.22	0.20
스페인	2.30	0.87	34.20	0.07	0.40	14.34	4.54	0.63	28.99	61.06	6.60	0.50	0.80	0.31	0.09
스웨덴	2.36	0.98	33.03	0.05	0.52	14.34	4.63	0.75	57.13	77.44	14.30	1.50	2.10	0.30	0.15
스위스	2.34	0.90	33.25	0.08	0.43	13.71	3.84	0.75	83.30	75.50	18.50	1.00	0.40	0.25	0.10
미국	2.52	1.06	33.75	0.17	0.38	13.82	3.70	0.64	51.50	61.01	18.80	0.10	0.60	0.14	0.19
독일	2.30	0.92	33.42	0.07	0.44	13.81	3.98	0.73	43.93	69.89	16.80	1.20	1.00	0.17	0.09
영국	2.51	1.26	33.62	0.14	0.51	13.55	3.90	0.61	41.05	62.80	19.20	2.60	1.40	0.06	0.17

다층 분석에 앞서 Level-1 개인 수준 변수들 간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리고 그러한 관계에서의 국가 간 변이가 어느 정도 있는지 탐색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 Level-1 변수들 간의 관계가 모든 국가에서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면 Level-2 국가 수준 변수들의 효과가 없다는 의미이며 다층분석을 수행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도 되기 때문이다. 이에 국가 별로 거주 자녀 수와 여성의 취업 상태, 교육 연수, 성역할 태도, 세 가지 주요 독립변수들 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그림 5-1]에서 [그림 5-3]은 국가 별로 거주 자녀 수와 취업 상태, 교육 연수, 성역할 태도 간의 연관 관계를 OLS로 추정된 기울기로 보여주고 있다. 이 단계에서 추정선(fitted line)은 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방향성)가 국가마다 어느 정도로 상이한지를 가늠해 보기 위한 탐색적인 목적으로 그려진 것이며 OLS 기울기 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

우선 여성의 취업 상태(0=미취업, 1=취업)와 자녀 수의 관계를 표시한 [그림 5-1]을 보면 두 변수의 관계에서 국가 간 변이가 매우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많은 국가들에서 현재 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들의 자녀 수가 미취업 상태에 있는 여성들의 자녀 수보다 작지만 그러나 그 정도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호주, 아일랜드, 폴란드, 일본 등의 경우에는 미취업 여성에 비해 취업 여성들의 거주 자녀 수가 매우 작은 편이나 오스트리아, 핀란드, 미국, 스페인, 체코 등의 국가들에서는 두 집단 간의 거주 자녀 수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한편 일부 국가들에서는 반대의 경향성도 보이고 있다. 덴마크, 노르웨이에서는 취업 상태 여성들의 자녀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많다. 아이슬란드, 스웨덴에서도 긍정적인 관계가 나타나나 유의하지는 않다. 한국, 슬로베니아도 취업 상태 여성들의 자녀 수가 약간 더 많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다.

74 저출산에 대한 문화적 접근 - 성평등주의와 출산의 관계

[그림 5-1] 여성의 취업 여부와 거주 자녀 수의 국가 간 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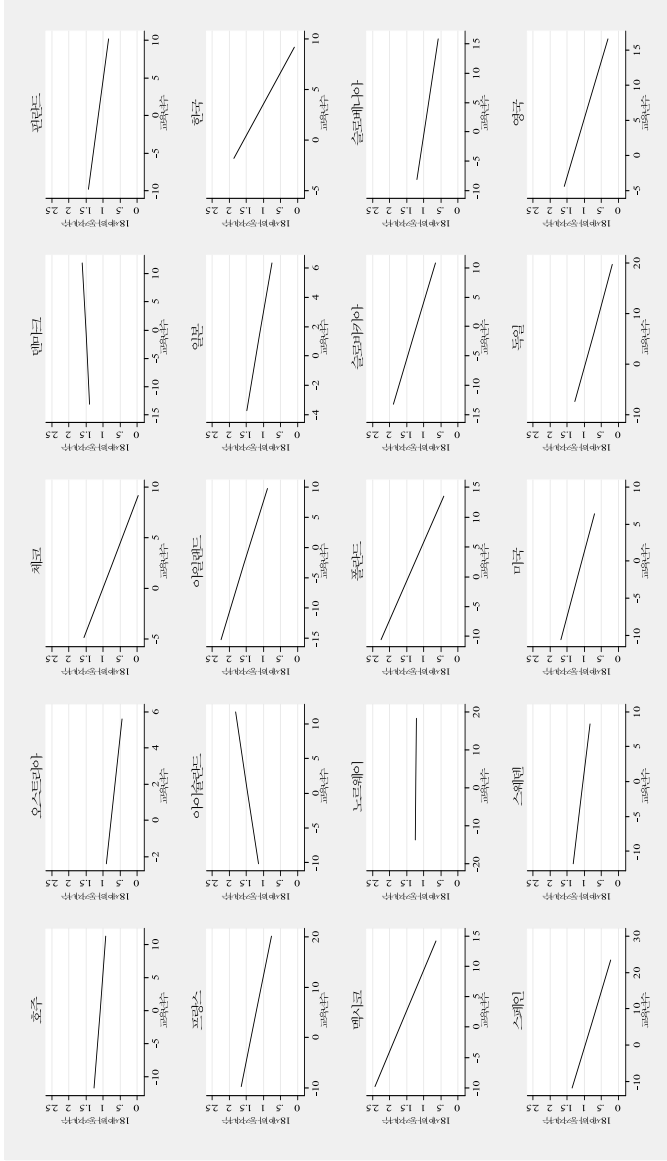


[그림 5-2]는 개별 국가 내 여성의 교육 수준(각국 평균을 중심으로 centering되어 있는 교육 연수)과 거주 자녀 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 역시 국가 간 변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고학력 여성들이 저학력 여성에 비해 자녀 수가 적은 편이지만 기울기의 국가 간 차이가 매우 크다. 일부 국가들에서는 교육 수준과 자녀 수의 부정적 관계가 역전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수가 오히려 더 많은 국가들은 대부분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이며, 특히 덴마크와 노르웨이에서 고학력 여성들의 자녀 수가 매우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동아시아와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여성의 학력이 증가할수록 출산율이 가파르게 떨어지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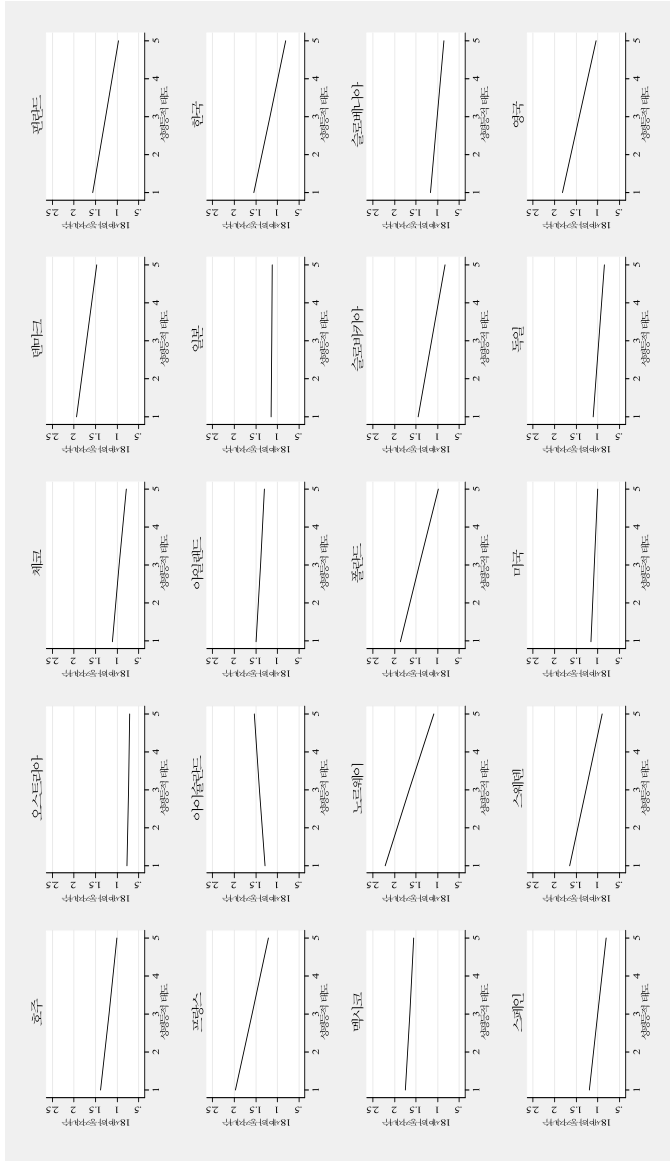
[그림 5-3]은 개별 국가 수준에서 여성의 성역할 태도와 자녀 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역시 국가 간 변이가 크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여성이 전통적 성역할 분담에 반대하는 태도를 취할수록, 즉 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성평등주의적일수록 거주 자녀 수가 적은 패턴이 나타나지만 기울기의 국가 간 차이가 매우 크다.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프랑스, 영국 등에서 성평등주의적 여성들과 전통주의적 여성들 간의 자녀 수 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난다. 흥미롭게도 한국 역시 성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진 여성들이 그렇지 않은 여성들에 비해 거주 자녀 수가 매우 적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미국, 독일,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멕시코 등에서는 성역할 태도에 따른 거주 자녀 수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76 저출산에 대한 문화적 접근 - 성평등주의와 출산의 관계

[그림 5-2] 여성의 교육 연수와 거주 자녀 수의 국가 간 변이



[그림 5-3] 여성의 성역할 태도와 거주 자녀 수의 국가 간 변이



〈표 5-2〉는 이상의 기술적 정보를 코딩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21개 국가들을 탈저출산 국가들과 초저출산 국가들로 구분해서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이때 구분 기준은 에스핑-앤더슨과 빌라리(2015, p.4)가 기간출산율(period fertility)을 기준으로 출산율 회복 국가와 미회복 국가들을 구분한 것을 이용한 것이다. -는 음의 연관관계, +는 양의 연관 관계, n는 연관 관계가 없음을 의미한다. --, ++는 기울기가 매우 가파름을 의미한다. 국가별로 코딩된 결과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눈에 띈다.

〈표 5-2〉 국가별 거주 자녀 수에 미치는 취업 상태, 교육 수준, 성역할 태도의 영향 요약

	탈저출산 국가들			초저출산 국가들			
	취업 상태	교육 수준	성역할 태도	취업 상태	교육 수준	성역할 태도	
호주	--	n	-	오스트리아	-	-	n
덴마크	++	n	-	독일	-	--	n
핀란드	n	-	-	스페인	n	--	-
프랑스	-	-	--	체코	-	---	-
노르웨이	+	n	--	폴란드	--	---	--
스웨덴	n	-	-	슬로바키아	-	--	-
아이슬란드	n	++	n	슬로베니아	n	n	n
미국	-	--	n	일본	-	-	n
영국	-	--	--	한국	n	---	--
아일랜드	--	--	n				
멕시코	n	---	n				

첫째, 취업 상태, 교육 수준, 성역할 태도가 거주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 중에서 국가별 변이가 가장 큰 항목은 여성의 교육 수준인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수가 적은 음의 관계를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경향성은 특히 초저출산 국가들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초저출산 국가들은 거의 예외 없이 고학력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자녀 수가 적은 반면, 탈저출산 국가들 중 일부는 교육 수준에 따른 자녀 수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아이슬란드에서는 고학력 여성들의 자녀 수가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초저출산 국가들 중에서도 체코, 폴란드, 한국은 출산에 미치는 교육의 부정적 효과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국가이다.

둘째, 여성의 취업과 자녀 수 역시 국가 간 변이가 큰데, 흥미롭게도 취업이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국가들이 상당히 많다. 탈저출산 국가들 중 핀란드, 스웨덴, 아이슬란드 그리고 초저출산 국가들 중 스페인, 슬로베니아, 한국 등이 취업과 자녀 수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 국가들이다. 다만 초저출산 국가들의 경우 취업모와 미취업모 모두 자녀 수가 매우 낮다는 특징이 있다.

셋째, 탈저출산 그룹과 초저출산 그룹 모두에서 성역할 태도와 자녀 수의 관계가 뚜렷하지 않은 국가들이 상당히 많다.

결론적으로 볼 때 여성의 교육 수준, 취업, 성역할 태도에 따라 자녀 수에서 차이가 나는 정도가 국가 간 변이를 상당히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그러한 국가 간 변이가 탈저출산 그룹과 초저출산 그룹 간의 차이로 패턴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물론 만약 개인적 수준에서 나타나는 변수 간 변이의 국가 간 차이가 탈저출산 그룹 대 초저출산 그룹 간 차이로 뚜렷하게 나타난다면 굳이 다층분석을 통해 Level-2 효과를 모형화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룹 내 차이가 뚜렷한 현재의 상황은 좀 더 세부적인 국가 수준의 변수들을 이용하여 개인 수준 효과의 국가 간 차이를 모형화해 볼 필요가 있음을 제기한다. 이어지는 다층분석을 통해 첫째, 미시적 수준에서 연령, 혼인 상태 등 인구학적 변수들을 통제 한 후에도 여성의 교육 수준, 취업 상태, 성역할 태도가 거주 자녀 수에 미치는 뚜렷한 효과가 있는지, 둘째, 미시 수준 출산 결정 요인들을 통제 한 후에

도 노동시장 특성,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 문화적 요인 등의 거시변수들이 국가 단위 출산율(거주 자녀 수 평균)에 미치는 효과가 있는지, 셋째, 미시 요인들과 거시 요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할 것이다.

실제 출산 결과에 가까운 거주 자녀 수에 대한 분석에 앞서 출산 의도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상적 자녀 수를 종속변수로 한 다층분석이며 모형은 거주 자녀 수 분석과 동일하게 구성하였다(표 5-3 참조). 모형 1은 미시변수들의 효과만을 보여주고 있다. 우선 연령은 이상적 자녀 수에 비선형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연령이 증가할수록 이상적 자녀 수가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하는 형태이다. 20대 초반에서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가 가장 많다가 점점 줄어들고 30대 중반 이후에 다시 증가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나 그 차이가 크지는 않다. 연령을 통제한 상태에서는 미혼이 기혼에 비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자녀 수가 적은 편이다. 주요한 관심변수인 교육, 취업, 태도의 효과도 뚜렷하게 나타나는데, 교육 연수가 증가할수록, 성역할 태도가 성평등주의적일수록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족 규모가 적으며 취업 여성이 비취업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가족 규모를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모형2는 모형1에 거시변수들의 효과를 추가한 것이다. 국가 수준에서 1인당 GDP,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남녀 임금 격차,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 남녀 간 문화적 차이가 이상적 자녀 수의 절편을 움직이는 효과가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1인당 GDP가 클수록 이상적 자녀 수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나 그 차이는 1000달러 증가 시마다 0.006명 증가하는 수준으로 매우 미미하다. 한편 노동시장 관련 두 변수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과 남녀 임금 격차는 모두 이상적 자녀 수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화적 변수인 남녀 간 성역할 인식 격차 역시 이상적 자녀 수에 영향이 없다. 그러나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은 이상적 자

녀 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효과를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할 때, 가족에 대한 현금 지원이 공공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 증가할수록 이상적 자녀 수는 0.96명씩 증가하며, 가족에 대한 서비스 지원이 공공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 증가할수록 이상적 자녀 수는 0.183명씩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가족에 대한 공공지원은 가임기 여성의 출산 의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거시적 변수인 것으로 보인다.

〈표 5-3〉 이상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거시적 요인들 다층분석

	모형 1	모형 2	모형 3
연령	-0.044(0.013) ***	-0.044(0.013) ***	-0.043(0.013) ***
연령 제곱	0.001(0.000) ***	0.001(0.000) ***	0.001(0.000) ***
이혼·사별	-0.016(0.034)	-0.017(0.034)	-0.019(0.034)
미혼	-0.096(0.023) ***	-0.099(0.023) ***	-0.098(0.023) ***
교육 연수	-0.009(0.004) **	-0.009(0.004) **	0.009(0.008)
성 평등주의적 태도	-0.042(0.009) ***	-0.044(0.009) ***	-0.030(0.016) *
취업	-0.105(0.021) ***	-0.105(0.021) ***	-0.084(0.044) *
GDP/1000		0.006(0.003) **	0.006(0.003) **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0.009(0.014)	0.01(0.014)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2		0.000(0.000)	0.000(0.000)
남녀 임금 격차		0.001(0.006)	0.004(0.006)
가족 현금 지원		0.096(0.057) *	0.111(0.060) *
가족 서비스		0.183(0.071) ***	0.183(0.076) **
남녀 간 성 역할 인식 격차		0.202(0.372)	0.449(0.428)
혼외관계		0.184(0.907)	0.05(0.903)
취업X현금 지원			-0.029(0.030)
취업X가족 서비스			0.009(0.039)
교육X남녀 임금 격차			-0.001(0.001) **
성 평등주의X남녀 성 인식 격차			-0.057(0.060)
Constant	3.469(0.217) ***	3.184(0.454) ***	3.028(0.456) ***
무선 효과			
SD(상수)	0.045	0.158	0.157
SD(Residual)	0.537	0.733	0.733
Observations	6,290	6,290	6,290
Number of groups	21	21	21

* p<0.1, ** p<0.05, *** p<0.01

모형3은 거시변수들과 미시변수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유일하게 나타나는 상호작용은 여성의 교육과 남녀 임금 격차의 상호작용으로, 남녀 임금 격차가 큰 사회에 있는 고학력 여성들은 그렇지 않은 사회에 있는 고학력 여성들에 비해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족 규모가 유의미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상으로 출산 의도와 관련이 있는 이상적 가족 규모에 대한 분석에서는 거시-미시 상호작용 효과가 제한적으로만 드러났다. 실제 출산 결과와 보다 관련이 있는 거주 자녀 수 분석에서는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지 살펴 보겠다. <표 5-4>는 거주 자녀 수를 종속변수로 한 다층분석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모형1은 미시변수들만의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여성의 연령이 많을수록 거주 자녀 수가 많으나 앞서 논의했던 것처럼 이 효과는 비선형적이다. 종속변수가 가구에서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하 자녀들이므로 여성의 연령이 높을수록 자녀 수가 많지만 자녀가 10대 후반에 이르러 독립하는 경우들 역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령과 자녀 수는 비선형적인 관계를 보이게 된다. 한편 기혼과 비교할 때 이혼, 사별의 경우 자녀 수가 적으며 미혼의 경우에도 적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인구학적 결정 요인을 통제한 후에도 여성의 취업, 교육 수준, 성역할 태도는 유의미하게 부정적인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취업 상태인 여성은 미취업 상태인 여성보다 자녀 수가 0.347명 적으며, 여성의 교육 연수가 1년 증가할수록 자녀 수는 0.03명씩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여성의 성평등주의적 태도가 1 단위 증가할수록 자녀 수는 0.021명씩 감소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다.

모형2는 모형1에 추가된 거시변수들의 절편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모형1과 비교할 때 미시 수준의 변수들의 영향력은 큰 변화가 없으며, 국가

의 노동시장, 제도, 문화 변수들은 거주 자녀 수에 뚜렷한 효과를 미치고 있다. 우선 앞서 논의된 바와 같이 거주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치는 혼외관계, 즉 제도로서의 결혼의 불안정성이 높을수록 거주 자녀 수는 적은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한편 보고하지는 않았으나 이 변수를 제외한 모형에서 상수를 제외한 다른 거시변수들의 효과에 큰 변화가 없어 혼외관계 변수는 상수에 매우 뚜렷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나 다른 거시변수들과는 독립적인 것으로 보인다.

혼외관계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여성 경제활동률과 거주 자녀 수 간에는 비선형적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대로 국가의 여성 경제활동률이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다가 이후 반등하는 패턴이 거주 자녀 수를 종속변수로 한 이 연구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드러나고 있다. 노동시장 변수들 중에서는 남녀 임금 격차가 높은 국가일수록 거주 자녀 수가 줄어드는 패턴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국가 수준에서 여성의 평균임금이 남성의 평균임금 대비 10% 포인트 떨어질 때마다 자녀 수는 0.13명씩 줄어드는 것으로 예측된다.

제도적 조건 변수들의 효과를 보면, 가족에 대한 현금수당은 자녀 수와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반면, 가족 서비스는 유의미한 효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가 발달한 사회일수록 자녀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 간 비교를 통해 볼 때 전체 공공지출에서 가족 서비스 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1% 증가할 때마다 자녀 수는 0.29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문화적 변수를 보면 남녀 간 성역할 인식의 격차가 큰 사회일수록 자녀 수가 적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점 척도로 측정된 성역할 분담에 대한 태도에서 남성의 평균적 태도가 여성의 평균적 태도에 비해 보수

적인 국가들에서 자녀 수가 적는데, 남녀 태도의 평균 차이가 1점씩 차이가 날 때마다 자녀 수는 0.849명씩 적은 것으로 예측된다.

〈표 5-4〉 거주 자녀 수에 영향을 미치는 미시적, 거시적 요인들 다층분석

	모형 1	모형 2	모형 3
연령	0.186(0.018) ***	0.185(0.018) ***	0.185(0.018) ***
연령2	-0.002(0.000) ***	-0.002(0.000) ***	-0.002(0.000) ***
이혼, 사별	-0.324(0.047) ***	-0.323(0.047) ***	-0.324(0.047) ***
미혼	-0.909(0.032) ***	-0.911(0.032) ***	-0.904(0.032) ***
교육 연수	-0.031(0.005) ***	-0.030(0.005) ***	-0.008(0.011)
성 평등주의적 태도	-0.021(0.012) *	-0.026(0.012) **	0.019(0.024)
취업	-0.347(0.030) ***	-0.346(0.030) ***	-0.451(0.065) ***
GDP/1000		0(0.002)	0(0.002)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		-0.133(0.076) *	-0.170(0.074) **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2		0.001(0.001) *	0.001(0.001) **
남녀 임금 격차		-0.013(0.005) ***	-0.010(0.005) **
가족 현금 지원		0.026(0.051)	0.181(0.056) ***
가족 서비스		0.293(0.060) ***	0.03(0.070)
남녀 간 성 역할 인식 격차		-0.849(0.320) ***	-0.057(0.470)
혼외관계		-1.657(0.725) **	-1.905(0.701) ***
취업X현금 지원			-0.212(0.040) ***
취업X가족 서비스			0.355(0.053) ***
교육X남녀 임금 격차			-0.002(0.001) **
성 평등주의X남녀 성 인식 격차			-0.218(0.102) **
Constant	-1.514(0.300) ***	3.476(2.641)	4.660(2.568) *
무선 효과			
SD(상수)	0.0558	0.115	0.110
SD(Residual)	1.001	1.001	0.996
Observations	6,290	6,290	6,290
Number of groups	21	21	21

* p<0.1, **p<0.05, ***p<0.01

모형3은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인 거시-미시 상호작용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 가설1은 여성의 취업이 출산에 미치는 영향은 가족에 대한 제도적 지원의 정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일 것으로 예측하였다. 예측한 대로 출산과 제도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크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현금수당과 가족 서비스가 여성의 취업과의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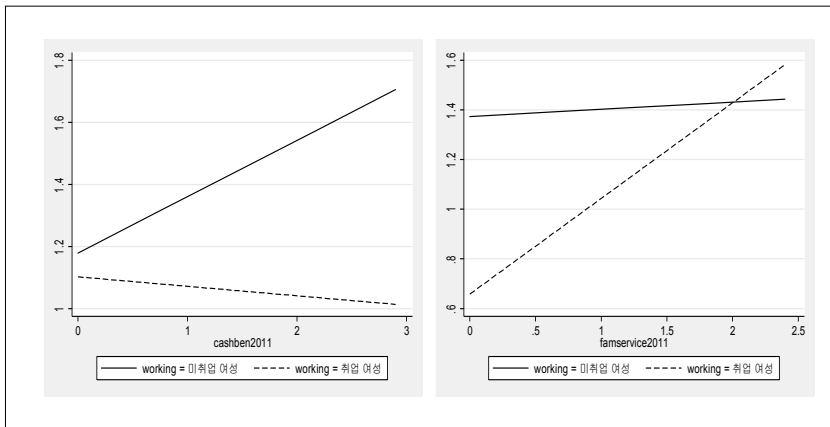
호작용을 통해 자녀 수에 미치는 영향력은 상반되게 나타난다. 이는 모형 3에서 상호작용 변수들을 투입했을 때 변화한 변수들의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들을 모두 읽어낼 때 가능해지는 해석이다. 우선 제도적 조건과 취업의 상호작용을 통제하면 취업이 자녀 수에 미치는 주효과의 부정적 영향력은 더욱 커진다(-0.345에서 -0.451로). 다시 말해 현금수당이나 가족 서비스가 0에 가까운 국가들에서, 그렇지 않은 국가들과 비교할 때, 취업 여성의 자녀 수는 미취업 여성의 자녀 수에 비해 훨씬 작다는 것이다. 한편 가족 현금수당의 주효과는 모형2와 비교할 때 유의미하게 긍정적인 효과로 변화하였다. 다시 말해 상호작용을 통제한 상태에서 보면 가족 현금 지원이 많을수록 상수효과가 지시하는 준거 집단(미취업 집단)의 자녀 수가 많아지며 그 효과는 상당히 큰 편으로 현금수당이 전체 공공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 포인트 증가할 때 마다 미취업 여성들의 자녀 수는 0.18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반면 모형2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던 가족 서비스의 주효과는 모형3에서는 사라졌다. 즉 가족 서비스가 증가한다고 해서 미취업 집단 여성들의 자녀 수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현금수당과 가족 서비스의 상반된 효과는 취업 상태와의 상호작용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가족에 대한 현금수당이 관대한 국가들에서 취업 여성들의 자녀 수는 미취업 여성들의 자녀 수보다 매우 작는데, 현금수당의 공공지출 비중이 1% 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취업 여성들의 자녀 수는 0.21명씩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반대로 가족 서비스가 공공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 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취업 여성들의 자녀 수는 0.355명씩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림 5-4]는 가족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들 중 현금수당과 가족 서비스가 자녀 수에 대해서 갖는 주효과와 여성의 취업 상태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볼 때, 가족에 대한 현금

수당과 가족 서비스에 대해 반응하는 여성들이 극명하게 다른 것으로 보인다. 가족에 대한 현금수당은 미취업 여성들의 자녀 수를 상당히 증가시키는 반면 취업 여성들의 자녀 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족 서비스는 취업 여성들의 자녀 수를 극적으로 증가시키는 반면 미취업 여성들의 자녀 수에는 효과를 못 미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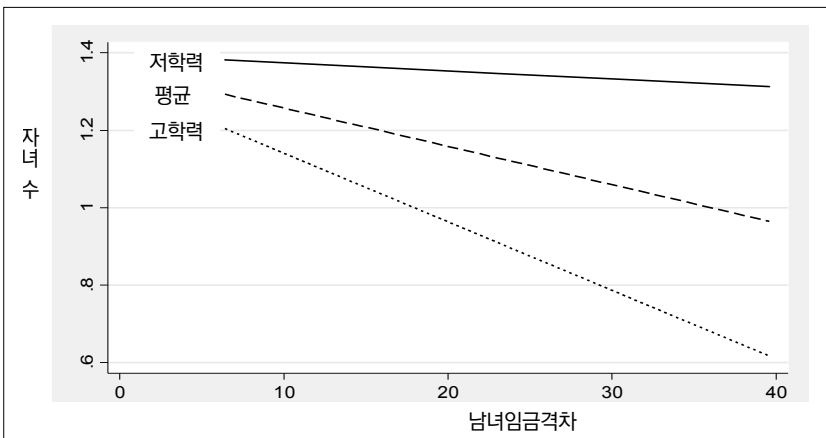
한편 여성의 학력과 자녀 수 간 관계의 국가 간 변이를 예측한 연구 가설2는 고학력 여성들의 출산율은 노동시장 내 여성 차별이 심한 사회에서 더 억제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예측한 대로 교육 수준과 남녀 임금 격차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크게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효과를 통제하면 교육 연수가 자녀 수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의 크기는 크게 줄어들고 통계적 유의성은 사라져 교육 연수의 주효과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상호작용 효과는 매우 큰 편으로 여성의 평균임금이 남성 평균임금 대비 10% 포인트 낮아질 때마다 자녀 수에 미치는 교육 연수의 부정적 기울기는 0.15씩 더 가파르게 변화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4] 가족 지원(현금수당과 가족 서비스)과 취업 상태의 상호작용 효과



개인 수준의 교육 연수 변수와 국가 수준의 남녀 임금 격차 변수 모두 연속변수이므로 상호작용 효과를 직관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 [그림 5-5]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시각화해서 제시하고 있다. 여성의 교육 수준을 크게 세 집단으로 구분하는데 이때 저학력 집단은 각 국가의 평균 교육 연수보다 5년 덜 교육받은 집단이며, 평균 집단은 평균 교육 연수 집단, 고학력 집단은 평균 교육 연수보다 5년 더 교육받은 집단으로 임의의 규정한 상태에서 각 집단의 자녀 수 예측값이 국가 수준 특성, 즉 남녀 임금 격차 변수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저학력 집단의 경우 남녀 임금 격차에 따른 자녀 수 변화가 거의 없는 반면 평균 학력 집단과 고학력 집단은 매우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고학력 집단의 경우 남녀 임금 격차가 10% 포인트 정도로 낮을 경우 자녀 수가 1.2명 정도로 1.38명의 저학력 집단과 큰 차이가 없지만 남녀 임금 격차가 40% 포인트 정도로 높을 경우 자녀 수는 0.6명 수준으로 떨어지며 저학력 집단의 자녀 수에 비해 반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5-5] 남녀 임금 격차와 학력의 상호작용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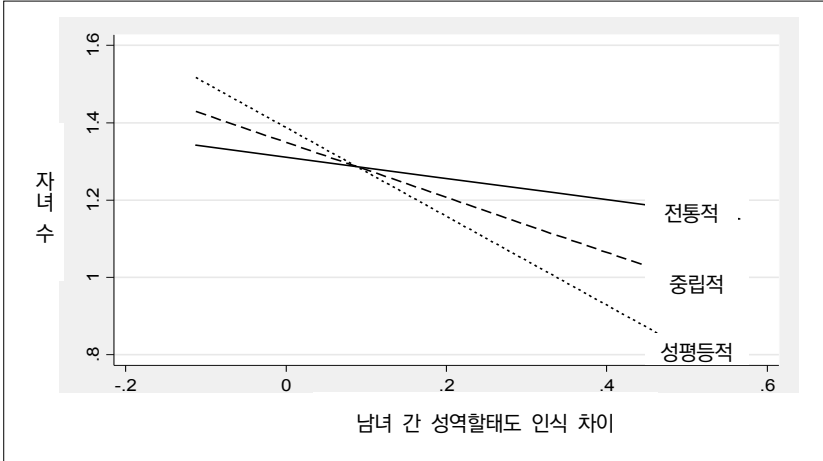


주: 저학력은 국가별 평균 교육 연수-5년, 평균 학력은 평균 교육 연수, 고학력은 평균 교육 연수 +5년.

다음으로 문화적 측면에서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맥락의 상호작용을 다룬 연구 가설³은 여성의 성역할 태도가 출산에 미치는 효과의 국가 간 변이를 예측하였다. 성역할 태도가 성평등주의적인 여성들의 출산율은 성역할 태도가 유사한 남성들을 만날 가능성에 달려 있으며 따라서 성역할 태도의 남녀 격차가 큰 국가들에서 낮을 것이라는 가설이다. 예측한 대로 여성의 성평등주의적 태도와 성역할 태도의 남녀 격차 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성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진 여성들의 자녀 수는 남성과 여성의 인식의 격차가 큰 사회에서 유의미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5점 척도로 측정된 성평등주의적 태도와 성역할 태도의 남녀 간 평균 점수 차이로 측정된 인식의 젠더 격차 모두 연속변수이므로 이 또한 해석이 직관적으로 쉽지 않다. [그림 5-6]은 두 변수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시각화해서 보여주고 있다. 성역할 분담에 대해 매우 동의한다는 의견(5점)을 표한 집단은 전통적인 집단으로,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1점)을 표한 집단은 성평등적인 집단으로, 그저 그렇다는 의견(3점)을 표한 집단은 중립적인 집단으로 규정하고 각 집단의 자녀 수가 국가 단위의 남녀 인식 차이 점수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본 것이다. 세 집단 모두 남녀 간 성역할 인식의 차이가 클수록 자녀 수가 줄어드는 것은 유사하나 그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통적인 집단의 경우 남녀 간 성역할 인식의 차이가 없는 경우와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경우 모두에 걸쳐 자녀 수가 1.2~1.35명 정도로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극적인 변화를 보이는 집단은 성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진 여성 집단으로 이들은 성역할 태도의 남녀 격차가 커질수록 자녀 수가 급격하게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5-6] 남녀 인식 차이와 여성의 성역할 태도의 상호작용 효과



제2절 한국 출산력 조사 분석 결과

우선, 조사 표본의 전반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각 변수와 출생아 수 및 출산 의도의 관계를 검토한다. 이후에 포아송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서 다른 변수를 통제된 상태에서 개별 변수와 출생아 수 및 출산 의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1. 기술통계

〈표 5-5〉는 한국 출산력 조사 표본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첫째, 부인과 남편의 연령은 2006년까지 상승하다가 이후에 다소 하락하는 추이를 보여주는데, 이는 혼인의 지연 및 연령 구성 변화를 반영한다. 예전에는 20대 중반 혹은 초반에 결혼하는 부부가 적지 않았으나 초혼 연령의

상승에 따라 이러한 부부의 수가 줄어들었으며, 이것이 유배우 부인 및 남성의 평균 연령을 높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배우 여성 및 남성의 평균 연령이 2006년 이후 하락한 것은 출생 코호트 크기의 변화를 반영한다. 베이비붐 세대(1955-63년생)가 2006년 이후 단산기에 접어들어 따라 40대 유배우 여성 및 남성의 상대적 비중이 감소했으며, 이것이 평균 연령의 하락으로 연결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출생아 수 평균은 1991년 2.2명에서 2015년에는 1.7명으로 감소했다. 유배우 여성의 평균 연령 변화를 고려하면, 실제 출산력 수준은 이러한 비교가 보여주는 것보다 더 하락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2015년 유배우 여성의 평균 연령은 38.6세로 가임기의 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의 추가 출산 가능성은 낮다고 할 수 있다. 반면, 1991년의 평균 연령은 34.6세였기 때문에, 보다 많은 여성이 출산할 가능성이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혼인 기간은 2006년까지 상승하다가 하락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앞서 논의한 출생 코호트의 크기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넷째, 아들 선호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아들 선호의 약화는 한국 사회의 출생 성비 정상화의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섯째, 유배우 여성 및 남편의 교육 수준은 꾸준히 상승했다. 유배우 여성의 대졸자 비율은 1991년에 7%에서 2015년 39%로 상승했으며, 남편의 경우에는 18%에서 50%로 상승했다. 마지막으로 유배우 여성의 취업률 또한 꾸준히 상승해서 1991년에 33%에서 2015년에 54%로 상승했다.

〈표 5-6〉-〈표 5-8〉는 출생아 수와 다른 변수들의 관계를 보여준다. 우선, 〈표 5-6〉은 출생아 수와 연속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우선, 부인과 남편의 연령과 출생아 수의 상관관계는 2006년을 예외로 하면 낮아지는 추세이다. 이는 고연령 유배우 부부와 저연령 유배우 부부의 출생아 수 차이가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출산율의 하

락에 따라 고연령대 부부들의 출생아 수가 예전보다 감소한 것이 원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혼인 기간과 출생아 수의 상관관계 역시 하락하고 있는데, 이 또한 전반적인 출산율 하락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표 5-5〉 기술통계

연도	변수														
	부인 연령		남편 연령		출생아 수		혼인 기간		아들 선호		출산 의도	부인 대출자	남편 대출자	취업 여부	사례 수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991	34.6	6.8	38.3	7.5	2.2	1.2	12.0	7.4	1.1	0.8	0.21	0.07	0.18	0.33	6,296
1994	35.1	6.9	38.7	7.6	2.0	1.1	12.1	7.7	1.0	0.8	0.25	0.10	0.22	0.45	5,619
1997	36.5	6.6	40.0	7.2	2.1	0.8	13.6	7.4	1.0	0.8	0.13	0.14	0.26	0.46	5,527
2000	36.7	6.9	40.1	7.5	1.9	0.9	13.3	7.8	0.8	0.7	0.17	0.16	0.27	0.46	5,516
2003	37.6	6.6	40.8	7.1	1.9	0.8	13.8	7.6	0.7	0.7	0.15	0.19	0.00	0.52	6,276
2006	39.3	6.0	42.4	6.4	2.0	0.7	15.1	7.0	0.6	0.7	0.09	0.21	0.35	0.52	5,543
2009	38.9	6.3	41.9	6.8	1.9	0.7	13.6	7.4	0.6	0.7	0.15	0.28	0.41	0.47	5,417
2012	39.0	6.0	41.9	6.5	1.9	0.7	13.8	7.3	0.5	0.7	0.14	0.35	0.48	0.50	6,093
2015	38.6	6.1	41.4	6.6	1.7	0.8	12.2	7.3	0.4	0.6	0.19	0.39	0.50	0.54	9,940
전체	37.4	6.7	40.6	7.1	1.9	0.9	13.2	7.5	0.7	0.7	0.17	0.22	0.31	0.48	56,227

주: 현재 부인과 남편 모두 초혼인 18~49세 유배우 여성.
자료: 출산력 조사. 1991-2015.

〈표 5-6〉 출생아 수와 다른 변수의 상관관계

연도	부인 연령	남편 연령	혼인 기간
1991	0.66	0.66	0.73
1994	0.60	0.61	0.69
1997	0.49	0.50	0.57
2000	0.51	0.52	0.59
2003	0.44	0.45	0.52
2006	0.23	0.24	0.32
2009	0.35	0.35	0.43
2012	0.34	0.33	0.41
2015	0.35	0.36	0.48
전체	0.41	0.43	0.53

〈표 5-7〉은 교육 수준과 출생아 수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교육 수준별 출생아 수 차이가 줄어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고졸 미만자들의 경우에는 1991년에는 평균 2.6명의 출생아를 갖고 있었던 데 반해, 2015년에는 이 수치가 1.9명으로 감소했다. 반면에 대졸자의 경우에는 두 해 모두 1.6명으로 같으며, 대체로 큰 변화가 없는 상태로 유지되었다. 또한, 고졸자와 대졸 미만의 경우에는 출생아 수가 이 기간 동안 약 0.2명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7〉 출생아 수와 교육수준과의 관계

연도	고졸 미만		고졸		4년제졸 미만		4년제졸 이상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1991	2.6	1.2	1.7	0.9	1.5	0.9	1.6	1.0
1994	2.6	1.2	1.7	0.9	1.5	0.9	1.5	0.8
1997	2.6	1.0	1.9	0.6	1.8	0.6	1.8	0.6
2000	2.4	0.9	1.8	0.8	1.5	0.8	1.6	0.8
2003	2.4	0.9	1.9	0.8	1.5	0.8	1.7	0.8
2006	2.2	0.8	2.0	0.6	1.8	0.7	1.9	0.6
2009	2.1	0.8	2.0	0.7	1.7	0.7	1.7	0.7
2012	2.0	0.9	2.0	0.7	1.8	0.7	1.7	0.7
2015	1.9	0.8	1.9	0.8	1.7	0.8	1.6	0.8
전체	2.5	1.1	1.8	0.8	1.7	0.8	1.7	0.8

〈표 5-8〉은 취업 상태 및 아들 선호 정도에 따른 출생아 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현재 취업 중인 여성의 출생아 수가 미취업 중인 여성들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차이는 다소 줄어들었다. 반면에 아들 선호와 출생아 수의 관계는 다소 약화되었다. 1991년에는 “아들이 없어도 된다”고 응답한 유배우 여성과 “아들이 있어야 한다”고 응답한 유배우 여성의 출생아 수 차이가 0.9명이었는데, 2015년에는 그 차이가 0.2명으로 줄어들었다. 두 집단 간 출생아 수 차이의 변화는 “아들이 있어야 한

다”고 응답한 여성들의 출생아 수 감소에 기인한다. 이는 강한 아들 선호가 출생아 수 증가로 연결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8〉 출생아 수와 취업 및 아들 선호의 관계

연도	취업 상태				아들 선호					
	현재 일함		현재 일 안 함		없어도 된다		있으면 좋다		있어야 한다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평균	표준 편차
1991	2.4	1.3	2.1	1.1	1.7	1.0	2.0	1.0	2.6	1.3
1994	2.3	1.2	1.9	1.0	1.9	1.0	1.7	1.0	2.5	1.2
1997	2.3	0.9	2.0	0.7	1.9	0.7	2.1	0.8	2.4	1.0
2000	2.0	0.9	1.8	0.8	1.7	0.8	1.9	0.8	2.2	0.9
2003	2.0	0.9	1.8	0.8	1.8	0.8	2.0	0.8	2.1	0.9
2006	2.0	0.7	1.9	0.6	1.9	0.6	2.0	0.6	2.1	0.7
2009	1.9	0.7	1.8	0.7	1.8	0.7	1.9	0.7	2.0	0.8
2012	1.9	0.7	1.8	0.7	1.8	0.7	1.9	0.7	1.9	0.7
2015	1.8	0.8	1.7	0.8	1.7	0.8	1.9	0.8	1.9	0.8
전체	2.0	0.9	1.9	0.8	1.8	0.8	1.9	0.8	2.3	1.1

〈표 5-9〉와 〈표 5-10〉은 앞서 출산 의도와 다른 변수들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표 5-9〉는 추가 자녀를 원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부인과 남편의 연령, 혼인 기간 차이를 보여준다. 우선, 추가 자녀를 원하지 않는 집단의 부인 및 남편 연령이 추가 자녀를 원하는 집단보다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차이는 남녀 모두 분석 기간 동안 8-9세 정도로 나타나고 있으며, 뚜렷한 추세를 보여주지 않는다. 한편, 혼인 기간의 경우 역시 추가 자녀를 원하지 않는 집단의 혼인 기간이 10년 정도 길게 나타나고 있다. 즉, 연령대가 높고 혼인 기간이 오래된 부부의 추가 출산 의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이들이 이미 원하는 수준의 출산을 완결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9〉 출산의도별 부인의 연령, 남편의 연령, 혼인 기간 비교

연도	부인의 연령		남편의 연령		혼인 기간	
	추가 자녀 원함	추가 자녀 원하지 않음	추가 자녀 원함	추가 자녀 원하지 않음	추가 자녀 원함	추가 자녀 원하지 않음
1991	27.6	36.5	30.7	40.3	4.0	14.2
1994	28.5	37.2	31.6	41.0	4.4	14.7
1997	28.9	37.6	32.0	41.2	4.8	14.9
2000	28.8	38.3	31.6	41.8	3.8	15.2
2003	29.8	39.0	32.6	42.3	4.7	15.5
2006	32.1	40.0	35.2	43.2	7.1	15.9
2009	31.3	40.3	34.0	43.3	4.5	15.3
2012	31.9	40.1	34.6	43.1	5.0	15.2
2015	32.6	40.1	35.0	42.9	4.3	14.1
전체	30.1	38.9	33.0	42.2	4.5	14.9

〈표 5-10〉은 출산 의도와 교육, 취업 상태, 아들 선호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첫째, 교육 수준별 출산 의도의 차이는 최근 들어 감소하고 있다. 고졸 미만과 대졸 이상 집단의 출산 의도를 비교해 보면, 1991년에는 이 둘 간의 차이가 26% 포인트였는데, 2015년에는 8% 포인트로 감소했다. 둘째, 취업 상태별 차이는 이 기간 동안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는다. 약 5% 포인트 차이가 지속적으로 관찰되고 있다. 셋째, 아들 선호에 따른 출산 의도의 차이는 줄어들고 있다. “아들이 없어도 된다”는 집단의 출산 의도는 10% 포인트 정도 하락한 반면에 “아들이 있어야 한다”는 집단의 출산 의도는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다가 2015년에 급격히 올라갔다.

〈표 5-10〉 출산의도와 교육, 취업, 아들 선호의 관계

연도	교육				취업 상태		아들 선호		
	고졸 미만	고졸	4년제졸 미만	4년제졸 이상	일함	일하지 않음	없어도 된다	있으면 좋다	있어야 한다
1991	0.10	0.30	0.43	0.36	0.18	0.23	0.26	0.25	0.16
1994	0.10	0.32	0.45	0.45	0.19	0.30	0.27	0.30	0.17
1997	0.04	0.17	0.26	0.20	0.09	0.17	0.15	0.15	0.10
2000	0.02	0.19	0.34	0.27	0.14	0.20	0.21	0.17	0.10
2003	0.03	0.15	0.34	0.21	0.13	0.18	0.16	0.14	0.14
2006	0.02	0.09	0.15	0.12	0.07	0.12	0.10	0.09	0.09
2009	0.04	0.12	0.27	0.18	0.11	0.18	0.13	0.17	0.16
2012	0.09	0.09	0.19	0.18	0.11	0.16	0.13	0.14	0.18
2015	0.16	0.12	0.23	0.24	0.17	0.22	0.19	0.20	0.23
전체	0.07	0.17	0.25	0.22	0.13	0.20	0.17	0.18	0.15

2. 성역할 태도와 출산(2012년과 2015년 비교)

앞서 살펴본 출생아 수 및 출산 의도와 개별 변수와의 관계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들 선호 정도는 출생아 수와 정(+)의 상관관계를 갖는 반면 출산 의도와는 대체적으로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그렇지만, 연령을 통제하면 이러한 관계는 사라질 가능성이 있다. 즉, 연령이 높은 사람들이 강한 아들 선호를 갖고 있으며 많은 자녀를 출산했지만, 이들의 추가 출산 의도가 높을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관계들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 절에서는 포아송 및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이를 살펴본다.

〈표 5-11〉은 출생아 수와 성역할 태도 및 취업 상태의 관계에 대한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성역할 태도는 2012년과 2015년 모두

출생아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이후에는 성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진 집단의 출생아 수가 그렇지 않은 집단보다 낮게 나타난다. 2012년에는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p=0.274$), 2015년에는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p=0.047$). 취업 상태 역시 출생아 수와 부정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 즉, 취업 유배우 여성의 출생아 수가 미취업 여성보다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차이는 2015년에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태도와 취업 상태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결과를 제시하지 않는다.³⁾ 이러한 결과는 개인 수준의 성평등주의적 태도와 취업 여부가 출생아 수와 부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러한 관계가 2015년에 2012년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즉, 출생아 수를 기준으로 보면 한국 사회는 여전히 경제학적인 모형의 주장대로 성평등주의와 취업이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다소 강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한국 사회의 출산율이 기회비용에 의해서 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사하며, 이는 저출산이 지속되는 원인 중의 하나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12〉는 출산 의도와 성역할 태도 및 취업 상태의 관계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성역할 태도의 경우에는 2012년과 2015년 모두 출산 의도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취업 여부는 2015년에 출산 의도와 정(+)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아 수 분석과 마찬가지로 두 변수들 간의 상호작용항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서 그 결과는 제시

3) 〈표 3-1〉에 제시한 여성의 선호실현 구분은 성평등주의적 태도와 취업 여부의 상호작용항이 유의미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데, 경험적인 분석 결과는 이와 같은 구분이 자료에 대한 설명력을 높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변수 간의 상호작용항은 아들 선호를 성평등주의적 태도의 측정치로 사용한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 않는다.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무시하고 회귀계수의 변화 방향을 살펴보면, 성역할 태도 회귀계수는 음수에서 양수로 변화했으며, 취업 여부는 두 해 모두 양의 값을 보여주며 그 크기가 2015년에 더 크다. 이는 성역할 태도가 출산 의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2015년 들어 상당히 감소했으며, 취업이 출산 의도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이 강화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출산 의도와 관련해서 보면, 성평등주의적 태도 및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출산 의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출산 의도가 향후 출산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성평등주의적 태도의 확산이 향후 출산율 반등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5-11) 출생아 수와 성 역할 태도 및 취업 상태의 관계(Poisson 회귀분석)

	2012(N=5,982)			2015(N=9,908)		
	b	s.e	p	b	s.e	p
성 역할 태도	-0.022	0.020	0.274	-0.032	0.016	0.047
취업(기준: 비취업)	-0.044	0.020	0.027	-0.066	0.016	0.000
연령 제곱	-0.033	0.000	0.000	-0.003	0.000	0.000
연령	0.197	0.020	0.000	0.224	0.016	0.000
혼인 기간	0.030	0.003	0.000	0.054	0.002	0.000
교육 수준(기준: 고졸)						
고졸 미만	-0.013	0.060	0.824	-0.020	0.062	0.742
4년제 졸업 미만	0.000	0.030	0.995	0.024	0.023	0.293
4년제 졸업 이상	-0.037	0.030	0.213	-0.021	0.023	0.375
가구 소득	0.000	0.000	0.121	0.000	0.000	0.028
가구 순재산	0.000	0.000	0.829	0.000	0.000	0.267
남편 연령	-0.005	0.004	0.158	-0.005	0.003	0.049
남편 교육 수준(기준: 고졸)						
고졸 미만	0.015	0.060	0.803	0.080	0.065	0.216
4년제 졸업 미만	0.012	0.032	0.715	0.010	0.025	0.672
4년제 졸업 이상	0.008	0.028	0.782	0.006	0.023	0.804
상수항	-3.218	0.395	0.000	-3.622	0.311	0.000

〈표 5-12〉 출산의도와 성 역할 태도 및 취업 상태의 관계(Logistic 회귀분석, 출생아 수 2 이하, 출생아 수 통제안함)

	2012(N=5,179)			2015(N=8,655)		
	b	s.e	p	b	s.e	p
성 역할 태도	-0.149	0.102	0.144	0.084	0.074	0.253
취업(기준: 비취업)	0.167	0.110	0.129	0.285	0.075	0.000
연령 제곱	0.005	0.002	0.004	0.002	0.001	0.031
연령	-0.450	0.122	0.000	-0.184	0.074	0.014
혼인 기간	-0.243	0.016	0.000	-0.319	0.012	0.000
교육 수준(기준: 고졸)						
고졸 미만	0.385	0.406	0.343	0.264	0.314	0.401
4년제 졸업 미만	0.146	0.143	0.307	-0.003	0.102	0.980
4년제 졸업 이상	0.216	0.147	0.142	0.042	0.104	0.683
가구 소득	-0.001	0.000	0.089	0.000	0.000	0.246
가구 순재산	0.000	0.000	0.178	0.000	0.000	0.522
남편 연령	-0.011	0.016	0.500	-0.016	0.010	0.135
남편 교육 수준(기준: 고졸)						
고졸 미만	-0.376	0.529	0.477	-0.177	0.420	0.673
4년제 졸업 미만	-0.229	0.154	0.138	0.067	0.108	0.539
4년제 졸업 이상	-0.103	0.143	0.474	0.083	0.104	0.427
상수항	10.726	2.128	0.000	5.196	1.293	0.000

〈표 5-13〉은 출생아 수가 2명 이하인 유배우 여성을 대상으로 출생아 수를 통제된 후에 성역할 태도 및 취업 여부가 출산 의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이는 추가 출산 의도는 현재의 자녀 수에 의해서 강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분석 결과 또한 출생아 수가 증가할수록 출산 의도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준다. 〈표 5-13〉의 결과는 〈표 5-12〉의 결과와 다소 다른데, 우선 취업 상태에 따른 출산 의도 차이가 두 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으며, 성역할 태도는 2012년에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무시하고 회귀계수의 변화 방향만을 해석한다면, 성역할 태도와 취업 여부의 회귀계수들이 양(+)의 방향으로 변화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성평등주의적 태도 및 취업이 출산 의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2015년

에 2012년보다 약화되었음을 시사한다. <표 5-12>의 결과와 더불어 <표 5-13>의 결과는 성평등주의적 태도의 확산이 출산율의 반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 5-13> 출산의도와 성 역할 태도 및 취업 상태의 관계(Logistic 회귀분석, 출생아 수 2 이하, 출생아 수 통제)

	2012(N=5,179)			2015(N=8,655)		
	b	s.e	p	b	s.e	p
성 역할 태도	-0.254	0.114	0.026	-0.034	0.082	0.682
취업(기준: 비취업)	-0.033	0.119	0.781	0.015	0.084	0.860
출생아(기준: 0명)						
1명	-1.393	0.252	0.000	-1.831	0.130	0.000
2명	-3.499	0.265	0.000	-3.692	0.143	0.000
연령 제곱	-0.002	0.002	0.214	-0.004	0.001	0.003
연령	0.043	0.129	0.739	0.175	0.081	0.030
혼인 기간	-0.124	0.016	0.000	-0.147	0.013	0.000
교육 수준(기준: 고졸)						
고졸 미만	0.238	0.421	0.572	0.455	0.337	0.178
4년제 졸업 미만	0.193	0.161	0.229	0.154	0.114	0.175
4년제 졸업 이상	0.155	0.164	0.346	0.060	0.117	0.612
가구 소득	0.000	0.000	0.469	0.000	0.000	0.798
가구 순재산	0.000	0.000	0.077	0.000	0.000	0.640
남편 연령	-0.023	0.018	0.205	-0.039	0.012	0.001
남편 교육 수준(기준: 고졸)						
고졸 미만	-0.255	0.539	0.637	-0.233	0.422	0.581
4년제 졸업 미만	-0.159	0.173	0.356	0.106	0.121	0.380
4년제 졸업 이상	-0.103	0.161	0.522	0.075	0.117	0.521
상수항	4.529	2.228	0.042	2.090	1.400	0.135

2012년 자료와 2015년 자료를 활용한 출생아 수 및 출산 의도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성역할 태도는 출생아 수와 음(-)의 관계를 갖고 그 관계가 2015년에 2012년보다 다소 강하게 나타나는 반면에, 출생아 수를 통제된 이후 출산 의도와는 양(+)의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취업 여부의 경우에는 출생아 수와는 음의 관계를 갖는 반면, 출산 의도와

는 유의미한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 이러한 결과는 성역할 태도와 취업 여부가 과거에는 출산율과 부정적인 관계를 맺었지만, 향후 출산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3. 아들 선호 및 취업 상태와 출산의 관계

〈표 5-14〉는 출생아 수와 아들 선호 및 취업 상태의 관계에 대한 포아송 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유배우 부인의 연령, 연령 제곱, 교육 수준, 남편의 연령과 교육 수준, 혼인 기간을 통제 변수로 포함했으며, 〈표 5-14〉는 아들 선호와 취업 상태의 회귀계수만을 제시한다. 아들 선호의 회귀계수는 0.05 내외에서 변동하고 있는데, 이는 “아들이 있어야 된다”는 여성이 “아들이 없어도 된다”는 여성보다 10% 정도 아이를 많이 출산했음을 의미한다. 반면 취업 상태의 효과는 연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데, 1997년을 제외하면 음의 값을 지니며 최근 들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여성의 취업이 총 출생아 수와 부정적인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 반면, 아들 선호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앞서 2012년 및 2015년 자료 분석 결과와 일치하는 패턴으로 취업 및 성평등주의적 가치관이 총 출생아 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5-14〉 출생아 수와 아들 선호 및 취업 상태의 관계(Poisson 회귀분석)

	아들 선호			취업 상태		
	b	s.e	p	b	s.e	p
1991	0.079	0.011	0.000	-0.013	0.019	0.494
1994	0.040	0.012	0.001	-0.015	0.020	0.802
1997	0.049	0.012	0.000	0.003	0.020	0.893
2000	0.060	0.014	0.000	-0.036	0.020	0.081

	아들 선호			취업 상태		
	b	s.e	p	b	s.e	p
2003	0.061	0.013	0.000	-0.044	0.019	0.022
2006	0.050	0.014	0.000	-0.016	0.020	0.419
2009	0.051	0.015	0.001	-0.040	0.020	0.051
2012	0.050	0.014	0.000	-0.043	0.019	0.024
2015	0.062	0.012	0.000	-0.067	0.016	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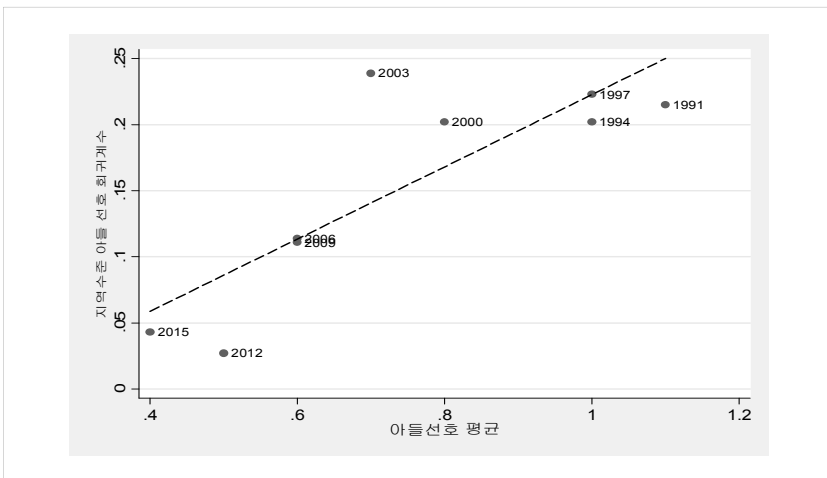
〈표 5-15〉는 〈표 5-14〉에서 논의한 아들 선호 및 취업 여부와 아울러 지역 수준의 아들 선호 정도와 출산율의 관계를 보여준다. 이 분석에서 지역 수준의 아들 선호 정도는 조사 구의 아들 선호의 평균값으로 측정했는데, 불완전하기는 하지만 이 변수는 해당 지역의 성평등주의적 태도와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가정한다. 우선, 〈표 5-14〉와 비교할 때, 지역 수준의 아들 선호를 통제한 이후에 아들 선호의 회귀계수의 크기는 다소 줄어들고 취업 상태가 출생아 수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다소 커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 수준의 아들 선호 정도는 출생아 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효과는 2000년대 후반 이후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준다. 1990년대 초반에는 아들 선호가 높은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 간에 출생아 수 차이가 컸지만 2000년대 후반 이후 이러한 차이가 작아지고 있는 것이다. 아들 선호 정도와 성평등주의의 관계를 고려할 때, 이는 지역 수준의 성평등주의의 발전과 출산의 관계가 2000년대 후반 이후 변화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여전히 성평등주의적 태도가 강한 지역의 출산율이 그렇지 않은 지역보다 높게 나타나고는 있지만, 그 차이는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한편, 〈표 5-15〉에 제시된 결과는 아들 선호 정도가 지속적으로 약화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전반적인 아들 선호의 약화(혹은 성평등주의의 진전) 속에서 성평등주의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점차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5-7]은

이를 시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즉, 1990년대 이후 아들 선호 정도의 하락과 지역 수준의 아들 선호 정도와 출산 간 관계의 약화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확실적인 증거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경향은 성평등주의의 진전에 따라 출산율이 반등한다는 최근 연구(Esping-Anderson and Billari, 2015)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표 5-15〉 출생아 수와 아들 선호 및 취업 상태의 관계(Poisson 회귀분석)

	아들 선호			취업 상태			조사구 수준 아들 선호		
	b	s.e	p	b	s.e	p	b	s.e	p
1991	0.057	0.012	0.000	-0.030	0.019	0.105	0.215	0.033	0.000
1994	0.023	0.012	0.065	-0.013	0.020	0.517	0.202	0.040	0.000
1997	0.033	0.012	0.007	-0.014	0.020	0.467	0.223	0.041	0.000
2000	0.045	0.014	0.001	-0.050	0.021	0.015	0.202	0.041	0.000
2003	0.048	0.013	0.000	-0.052	0.019	0.006	0.239	0.051	0.000
2006	0.043	0.014	0.003	-0.017	0.020	0.382	0.114	0.057	0.046
2009	0.041	0.016	0.010	-0.040	0.020	0.050	0.111	0.051	0.031
2012	0.047	0.015	0.002	-0.043	0.019	0.024	0.027	0.047	0.568
2015	0.059	0.013	0.000	-0.068	0.016	0.000	0.043	0.049	0.341

〔그림 5-7〕 지역 수준 아들 선호에 따른 출생아 수 차이와 아들 선호의 변화



〈표 5-16〉은 지역 수준의 아들 선호 정도가 출생아 수와 아들 선호 및 취업 상태의 관계를 어떻게 조절하는지를 보여준다. 아들 선호가 높은 지역은 보수적인 성역할 태도가 강한 지역이라고 가정할 수 있다. 〈표 5-16〉에 제시된 분석 결과는 아들 선호 및 취업 상태가 출생아 수에 미치는 영향이 해당 지역의 아들 선호 정도에 의해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보여준다. 개인 수준의 아들 선호와 지역 수준의 아들 선호의 상호작용항은 모든 해에 통계적으로 무의미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취업 상태와 지역 수준의 아들 선호 정도의 상호작용항은 1990년대 초반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졌지만, 1990년대 후반부터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5-16〉에 제시된 1990년대 초반 취업 상태의 회귀계수가 음수이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1990년대의 패턴은 다음과 같이 해석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취업 중인 여성은 미취업 여성보다 출생아 수가 적는데, 아들 선호가 강한 지역에서는 그 차이가 작다. 즉, 아들 선호가 강한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취업 상태에 따른 출생아 수 차이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반면 아들 선호가 약한 지역에서는 취업 상태에 따른 출생아 수 차이가 존재한다. [그림 5-7]에서 보여준 전반적인 아들 선호 정도의 하락과 함께 취업 상태와 지역 수준 아들 선호 정도의 상호작용항의 크기 또한 작아진다. 이는 아들 선호의 약화(혹은 성평등주의의 강화)가 진행되면서 보수적인 지역적 특징이 출산과 취업의 관계를 조절하는 효과가 하락했음을 시사한다.

〈표 5-16〉 출생아 수와 이틀 선호 및 취업 상태의 관계(Poisson 회귀분석)

	이틀 선호			취업 상태			조사구 수준 이틀 선호			이틀 선호와 조사구 수준 이틀 선호			취업 상태와 조사구 수준 이틀 선호		
	b	s.e	p	b	s.e	p	b	s.e	p	b	s.e	p	b	s.e	p
1991	0.015	0.047	0.743	-0.266	0.076	0.000	0.072	0.070	0.305	0.037	0.041	0.363	0.195	0.061	0.001
1994	-0.041	0.048	0.387	-0.204	0.078	0.009	0.009	0.081	0.916	0.063	0.046	0.171	0.188	0.075	0.012
1997	-0.017	0.047	0.719	-0.131	0.080	0.103	0.075	0.081	0.358	0.053	0.048	0.273	0.123	0.084	0.141
2000	0.035	0.049	0.480	-0.179	0.076	0.019	0.106	0.076	0.164	0.011	0.049	0.819	0.138	0.079	0.080
2003	0.050	0.050	0.319	-0.110	0.078	0.160	0.194	0.093	0.038	-0.004	0.063	0.955	0.078	0.102	0.445
2006	-0.008	0.050	0.876	-0.044	0.075	0.557	0.025	0.103	0.806	0.078	0.074	0.293	0.042	0.115	0.715
2009	0.024	0.046	0.606	-0.076	0.060	0.206	0.060	0.085	0.482	0.028	0.071	0.694	0.062	0.097	0.526
2012	0.035	0.042	0.401	-0.030	0.053	0.567	0.027	0.077	0.725	0.020	0.069	0.766	-0.024	0.090	0.790
2015	0.052	0.034	0.126	-0.055	0.039	0.161	0.053	0.074	0.475	0.014	0.070	0.845	-0.030	0.087	0.728

〈표 5-17〉은 출산 의도를 종속변수로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5-17〉에 따르면 출생아 수를 통제하지 않으면 일부 연도를 제외하면 아들 선호가 강한 여성과 취업 중인 여성의 출산 의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역 수준의 아들 선호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출생아 수를 통제한 이후의 결과는 이와는 상당히 다르다. 우선, 취업 상태 회귀계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이는 취업과 출생아 수 간에 존재하는 음의 상관관계로 인한 것이다. 즉, 취업 여성의 출생아 수는 미취업 여성보다 적고 출생아 수는 출산 의도와 음의 상관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출생아 수를 통제하지 않은 경우에 취업 여부가 출산 의도에 긍정적인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출산 의도가 향후 출산 예측을 위한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결과는 여성의 취업이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에서 상당 부분 약화되었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둘째, 지역 수준의 아들 선호 정도는 출생아 수를 통제하면 1990년대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효과를 가졌다. 이는 지역 수준의 아들 선호와 출생아 수 간에 양의 상관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는 1990년대에는 지역 수준의 아들 선호가 출산 의도에 영향을 미쳤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는 2000년대 들어 사라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역 수준의 아들 선호 정도와 성평등주의가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러한 결과는 한국 사회에서 성평등주의가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가 점차 약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성평등주의적 접근에서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게 성평등주의의 진전이 아직까지 출산율의 반등으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지만, 최소한 성평등주의적 태도가 출산에 미치는 부정적인 효과는 약화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다소 확장해서 해석하면, 1990년대 이후 한국 사회는 성평등주의의 확산이 출산율의 하락으로 연

결되는 단계를 지나가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5-17〉 출산 의도와 아들 선호 및 취업 상태의 관계(다수준 logistic 회귀분석)

	출생아 수 통제 안 함								
	아들 선호			취업 상태			조사구 수준 아들 선호		
	b	s.e	p	b	s.e	p	b	s.e	p
1991	0.235	0.059	0.000	0.260	0.105	0.014	0.357	0.210	0.089
1994	0.005	0.060	0.938	0.397	0.094	0.000	0.275	0.220	0.211
1997	0.276	0.068	0.000	0.159	0.114	0.162	0.416	0.278	0.135
2000	0.186	0.077	0.016	0.586	0.112	0.000	-0.324	0.256	0.205
2003	0.176	0.069	0.011	0.388	0.098	0.000	0.178	0.290	0.539
2006	0.202	0.086	0.019	0.068	0.115	0.555	0.193	0.389	0.620
2009	0.397	0.085	0.000	0.150	0.110	0.172	0.458	0.308	0.138
2012	0.306	0.075	0.000	0.065	0.099	0.514	0.114	0.249	0.648
2015	0.312	0.058	0.000	0.256	0.068	0.000	0.199	0.196	0.309

	출생아 수 통제함								
	아들 선호			취업 상태			조사구 수준 아들 선호		
	b	s.e	p	b	s.e	p	b	s.e	p
1991	0.478	0.071	0.000	-0.122	0.124	0.324	0.699	0.249	0.005
1994	0.047	0.069	0.494	0.162	0.109	0.139	0.585	0.256	0.023
1997	0.480	0.079	0.000	-0.115	0.129	0.371	0.940	0.325	0.004
2000	0.426	0.088	0.000	0.217	0.128	0.089	0.133	0.292	0.648
2003	0.409	0.079	0.000	0.037	0.113	0.745	0.638	0.333	0.056
2006	0.246	0.087	0.005	-0.032	0.118	0.789	0.298	0.397	0.453
2009	0.525	0.094	0.000	-0.107	0.121	0.375	0.823	0.330	0.013
2012	0.504	0.085	0.000	-0.127	0.111	0.253	0.274	0.277	0.322
2015	0.560	0.067	0.000	0.002	0.077	0.982	0.313	0.221	0.157

제 6 장 결론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우선, 21개국의 비교 분석 결과는 사회 전체적 수준에서의 성평등주의의 제도화, 규범화 정도에 따라 미시적 수준에서의 출산 결정 요인들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자녀 수가 적으나 이러한 부정적 관계는 노동시장에서의 경제적 기회, 특히 남녀 임금 격차가 높은 사회일수록 악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미시적 수준에서 여성의 취업은 출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보이고 있으나 양육에 대한 공적 서비스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이러한 부정적 관계가 완화되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성평등주의적 성역할 태도를 가진 여성일수록 자녀 수가 적으나 이러한 관계는 성역할에 대한 남녀의 인식 격차가 큰 사회일수록 악화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취업 상태일수록, 성평등주의적 태도를 가지고 있을수록 거시적 조건의 성평등주의 정도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출산율 변화에 대한 분석은 성평등주의적 태도와 취업 여부가 출산에 미치는 영향이 지난 25년 동안 큰 폭으로 변화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성평등주의적 태도 및 취업 여부가 출생아 수에 영향을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한편, 성평등주의적 태도가 출산 의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또한 크게 줄지 않은 반면, 취업 여부는 출산 의도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 수준의 성평등주의 정도가 출생아 수 및 출산 의도에 미치는 영향은 2000년대 들어 다소 변화했는데, 1990년대에는 지역 수준의 성평등주의가 출생

아 수 및 출산 의도와 부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었던 반면에, 2000년대에는 이러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2000년대 들어 성평등주의와 출산 사이의 관계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변화는 향후 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단, 아직까지 성평등주의적 태도와 출산 행위 및 출산 의도 간에 긍정적인 관계는 발견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향후 세밀하게 관찰해야 할 연구 주제라고 판단한다.

Myrsklya et al.(2009)에서는 한국, 일본이 HDI와 출산율 관계의 역전을 보이고 있지 않은 예외적인 국가들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일-가족 양립과 젠더 평등의 미제도화의 결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일-가족 양립 그리고 젠더 평등의 제도들을 통해 인적 개발의 도전을 대응하는 데 실패한 것이야말로 부유한 동아시아 국가들이 지속적으로 HDI-출산율의 부정적 관계를 보이고 있는 이유이다(p.743)”라는 결론을 도출하고 있다. 여기에 이 연구는 젠더 평등의 미제도화의 결과 이들 국가들에서 가장 출산에 부정적인 결과를 보이고 있는 집단이 고학력, 진보적, 취업 여성들일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 여성 집단은 사회 전체적인 수준에서의 성평등주의적 재조직화가 일어나기 전에는 쉽게 출산 결정을 바꾸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함의한다.

참고문헌 <<

- 계봉오, 김영미. (2014). 한국 여성의 결혼, 출산 및 경제활동 참가 형태에 대한 연구; 다중상태 생명표(Multi-state life table) 적용. 사회연구. 제25호 pp.79-113.
- 김영미. (2009). 분포적 접근으로 본 한국 성별임금격차 변화, 1982~2004년. 경제와 사회. 제84호. pp.206-229.
- 김영미, 계봉오. (2015). 이행의 계곡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성의 고용과 출산에 관한 성평등적 접근. 한국여성학.
- 이성용. (2006). 경제위기와 저출산. 한국인구학. 29(3). pp.111-137.
- 정경희. (2006). 인구 정책의 역사와 가족 정책의 등장. 김태현 등 편. 인구대사전. pp.485-488.
- 정성호. (2009). 저출산에 관한 이론적 접근. 한국인구학. 32(2). pp.161-183.
- 최경수. (2004). 출산율 하락 추이에 대한 분석. 한국인구학. 27(2). pp.35-59.
- 허수연. (2008). 맞벌이 가구 여성과 남성의 가사노동 시간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24(3). pp.177-210.
- Ahn, N. and Mira, P. (2002). A note on the changing relationship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rates in developed countries.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5(4), pp.667-682.
- Ajzen, I. (1991).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50(2), pp.179-211.
- Alter, G., Oris, M., and Tyurin, K. (2007). The shape of a fertility transition: An analysis of birth intervals in Eastern Belgium. Paper presented to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Annual Meeting, March 29-31, 2007.
- Arpino, B., Esping-Andersen, G. and Pessin, L. (2015). How do changes in gender role attitudes towards female employment influence fertility? A macro-level analysi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1(3), pp.370-382.

- Becker, G. S. (1960). An economic analysis of fertility. pp.209-240 in Demographic and Economic Change in Developed Countries. edited by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Billari, F. and H.-P. Kohler. (2004). Patterns of low and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Population Studies*, 58(2). pp.161-176.
- Billingsley, S. and Ferrarini, T. (2014). Family policy and fertility intentions in 21 European countrie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6(2), pp.428-445.
- Breen, R. and Cooke, L. P. (2005). The persistence of the gendered division of domestic labour.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1(1), pp.43-57.
- Brewster, K. L. and Rindfuss, R. R. (2000).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n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pp.271-296.
- Brinton, M. C. (2016). Intentions Into Actions Norms as Mechanisms Linking Macro-and Micro-Levels.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 Brodmann, S., Esping-Andersen, G. and Güell, M. (2007). When fertility is bargained: Second births in Denmark and Spain.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3(5), pp.599-613.
- Budig, M. (2003). Are women's employment and fertility histories interdependent? An examination of causal order using event history analysis. *Social Science Research*, 32, pp.376-401.
- Calot, G. (1993). Relationships between cohort and period demographic indicators: translation revisited. *Population (English edition)* 5. pp.183-222.
- Castles, F. G. (2003). The world turned upside down: below replacement

- fertility, changing preferences and family-friendly public policy in 21 OECD countri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13(3), pp.209-227.
- Choe, K. M. (2015). Paths to very low fertility and not so low fertility in economically advanced countries. Paper presented to 2015 International Conference on Emerging Issues in Low Fertility and Ageing Societies.
- Choe, K. M. and Park, K. A. (2006). Fertility decline in South Korea: Forty years of policy-behavior dialogue. *The Journal of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29(2). pp.1-26.
- Choe, M. K. (2006). Modernization, gender roles, and marriage behaviors in South Korea, in Transformation in Twentieth Century Korea, eds Y.-S. Chang and S. H. Lee, New York: Routledge, pp.291-309.
- Cleland, J. and C. Wilson. (1987). Demand theories of the fertility transition: An iconoclastic View. *Population Studies*, 41(1). pp.5-30.
- Craig, L. and Siminski, P. (2011). If men do more housework, do their wives have more babies?. *Social Indicators Research*, 101(2), pp.255-258.
- Crompton, Rosemary, and Clare Lyonette. (2005). The New Gender Essentialism: Domestic and Family 'Choice' and Their Relation to Attitudes.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6(4). pp.601-620.
- Del Boca, D. and Vuri, D. (2007). The mismatch between employment and child care in Italy: the impact of rationing.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20(4), pp.805-832.
- Dyson, T. (2010). Population and Development. Zed Books
- Esping-Andersen, G. and Billari, F. C. (2015). Re-theorizing Family Demographic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1),

pp.1-31.

- Foster, A. (1990). Cohort analysis and demographic translation: A comparative study of recent trends in age specific fertility rates from Europe and North America. *Population Studies*, 44(2), pp.287-315.
- Frejka, T. (2008). Overview Chapter 5: Determinants of family formation and childbearing during the societal transition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Demographic Research*, 19(7), pp.139-170.
- Gauthier, A. H. (2007). The impact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 in industrialized countr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6. pp.323-346.
- Gauthier, A. H. and Hatzius, J. (1997). Family benefits and fertility: An econometric analysis. *Population studies*, 51(3), pp.295-306.
- Gauthier, A. H. (2007). The impact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 in industrialized countr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6(3), pp.323-346.
- Goldscheider, F., Bernhardt, E. and Lappegård, T. (2015). The gender revolution: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hanging family and demographic behavi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2), pp.207-239.
- Goldstein, J. R., Sobotka, T. and Jasilioniene, A. (2009). The End of “Lowest-Low”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5(4), pp.663-699.
- Gornick, J. C., Meyers, M. K. and Ross, K. E. (1997). Supporting the employment of mothers: Policy variation across fourteen welfare stat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7(1), pp.45-70.
- Hakim, C. (2000). Work-Lifestyle Choices in the 21st Century:

- Preference Theory. Oxford University Press.
- Hakim, C. (2002). Lifestyle preferences as determinants of women's labor market careers. *Work and Occupation* 29(4). pp.428-459.
- Hakim, C. (2003). A new approach to explaining fertility patterns : Preference theor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9(3): pp. 349-374.
- Hilgeman, Christin, and Carter T. Butts, (2009). Women's employment and fertility: A welfare regime paradox. *Social Science Research*, 38(1). pp.103-117.
- Kim, H. S. (2014). Female labour force participation and fertility in South Korea. *Asian Population Studies*, 10(3), pp.252-273.
- Kirk, D. (1996). Demographic transition theory. *Population Studies* 50(3). pp.361-387.
- Knodel, J. (1986). Demographic transitions in German villages. In Coale, A. J. and Watkins, S. C. (1986). (eds). *The Decline of Fertility in Europe: the Revised Proceedings of a Conference on the Princeton European Fertility Project*. pp.337-389.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Kögel, T. (2004). Did the association between fertility and female employment within OECD countries really change its sign?.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17(1). pp.45-65.
- Kohler, H. P., Billari, F. C. and Ortega, J. A. (2002). The emergence of lowest-low fertility in Europe during the 1990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8(4), pp.641-680.
- Kreyenfeld, M. (2010). Uncertainties in Female Employment Careers and the Postponement of Parenthood in Germany.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26(3). pp.351-366.
- Kwon, T. H. (1993). Exploring socio-cultural explanations of fertility

- transition in South Korea. In R. Leete and I. Alam. (Eds.), *The Revolution in Asian fertility* (pp.41-53). Oxford: Clarendon Press.
- Kye, B. (2012) Cohort Effects or Period Effects? Fertility Decline in South Korea in the Twentieth Century.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31(3). pp.387-415.
- Kye, Bongoh. (2014). Son preference and fertility transition in Korea. *The Journal of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37(3). pp.107-141.
- Kye, Bongoh. (2015). Cross-sectional average fertility (CAF): Properties and comparison with other measures. *The Journal of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38(3). pp.113-139.
- Lee, G. and Lee, S. (2014). Childcare availability, fertility and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in Japan. *Journal of the Japanese and International Economies*. 32. pp.71-85
- Lesthaeghe, R., (1995).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Western countries: An interpretation. Gender and family change in industrialized countries, pp.17-62.
- Liefbroer, A. C., Klobas, J. E., Philipov, D. and Ajzen, I. (2015). 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a Macro-Micro Perspective: A Conceptual Framework. In *Reproductive Decision-Making in a Macro-Micro Perspective* (pp. 1-15). Springer Netherlands.
- Mason, K. O. (1997). Explaining fertility transitions. *Demography* 34(4). pp.443-454.
- Matysiak, A. and Vignoli, D. (2012). Methods for reconciling the micro and the macro in family demography research: A systematisation. In *Advanced Statistical Methods for the Analysis of Large Data-Sets* (pp. 475-484). Springer Berlin Heidelberg.
- Matysiak, Anna and Daniele Vignoli. (2010). Employment Around First

- Birth in Two Adverse Institutional Settings: Evidence from Italy and Poland. *Journal of Family Research*, 22(3). S.331-349.
- McDonald, P. (2002). Sustaining fertility through public policy: the range of options. *Population (English Edition)*, 57 (3). pp.417-446.
- McDonald, P. (2008). Very low fertility consequences, causes and policy approaches.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6(1). pp.19-23
- McDonald, P. (2000).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pp.427-439.
- McRae, S. (2003). Constraints and choices in mothers' employment careers: a consideration of Hakim's preference theory.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54(3). pp.317-338.
- Myrskylä, M., Kohler, H.-P. & Billari, F. C. (2009). Nature 460, 741-743.
- Myrskylä, M., Kohler, H.P. and Billari, F. (2011). High development and fertility: fertility at older reproductive ages and gender equality explain the positive link.
- Neyer, G., Vignoli, D. and Lappegård, T. (2011). Gender, economic conditions and fertility. Does context matter for fertility intentions. In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Annual Meeting, Washington, DC, March.
- Notestein, F. W. (1945). Population-The Long View. in Theodore W.Schultz, ed., Food for the Worl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pp.36-57.
- Pullum, T. W. (1980). Separating Age, Period, and Cohort Effects in White U.S. Fertility, 1920 - 1970. *Social Science Research*. 9. pp.225-244.
- Rabe-Hesketh, S. and Skrondal, A. (2012). Multilevel and Longitudinal

- Modeling Using Stata Volume II: Categorical Responses, Counts, and Survival. 3rd edition. STATA Press.
- Reher, D. and Sanz-Gimeno, A. (2007). Rethinking Historical Reproductive Change: Insights from longitudinal data for a Spanish tow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3(4), pp.703-727.
- Rendall, M. S., Clarke, L., Peters, H. E., Ranjit, N., & Verropoulou, G. (1999). Incomplete reporting of men's fertility in the United States and Britain: A research note. *Demography*, 36(1), pp.135-144.
- Rindfuss, R. R., Guzzo, K. B. and Morgan, S. P. (2003). The changing institutional context of low fertility.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22(5-6), pp.411-438.
- Robert, P. and E. E. Bukodi. (2005). The Effects of the Globalization Process on the Transition to Adulthood in Hungary. in H.Blossfeld, E.Klizing, M.Mills and K.Kurtz(eds.), *Globalization, Uncertainty, and Youth in Society*, Londong: Routledge.
- Rosen, B. C. and La Raia, A. L. (1972). Modernity in women: An index of social change in Brazil.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34(2), pp.353-360.
- Schultz, T. W. (1973). The value of children: An economic perspec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1(2). pp.S2-S13.
- Scott, J. and M. Braun. (2006). Individualization of family values? in P. Ester, M. Braun, and P. Mohler (eds.), *Globalization, Value Changes and Generations*. Brill Academic Publishers.
- Sleebos, J. (2003). Low fertility rates in OECD countries.
- Tomlinson, Jennifer. (2006). Women's work-life balance trajectories in the UK: Reformulating choice and constraint in transitions

- through part-time work across the life-course. *British Journal of Guidance and Counselling* 34(3): 365-382.
- Tuljapurkar, S. (2009). Demography: Babies make a comeback. *Nature*, 460(7256), pp.693-694.
- van de Kaa, D. J. (1987). Europe's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Bulletin*, 42(1). pp.1-59.
- van de Walle, F. (1986). Infant mortality and the European demographic transition. In Coale, A. J. and Watkins, S. C. (1986). (eds). *The Decline of Fertility in Europe: the Revised Proceedings of a Conference on the Princeton European Fertility Project*. pp.201-233. New Jersey: Princeton University Press.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의학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원종류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정기간행물회원 : 3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www.kihasa.re.kr) - 발간자료 - 간행물구독안내

▶ 문의처

-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1~5F
간행물 담당자 (Tel: 044-287-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